

인권정보자료실
CPb1.107

민주화운동유적지 대구·경북지역 기초조사 발굴작업 보고서

민주화운동유적지 대구·경북지역 기초조사 발굴작업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과 함께 한국 사회 발전의 두가지 정신적 기둥 가운데 하나인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1년 6월 28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하여 2002년 1월 29일, 민간기구(행정자치부 등록)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속된 민주화운동의 역사 정리 사업과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 및 민주발전 지원사업,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민주화운동 사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및 학술 조사·연구 사업 등이 기념사업회가 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현대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체계화하여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시민들의 삶과 문화 속에 내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고 지키며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과 미래의 희망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8층 2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16
<http://www.kdemocracy.or.kr>

인권정보자료실
CPb1.1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유적지

대구·경북지역

기초조사 발굴작업 보고서

2004.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차례

■ 민주화운동 유적지 대구·경북지역 기초조사 보고서를 내며 5

I. 사업의 개요와 수행 절차

1. 사업 취지와 내용 9

2. 사업 수행 절차 : 구체적인 조사·작업 흐름도 13

II. 작업 진행 경과: 현재까지 본 연구팀의 구성과 논의과정

1. 작업팀의 구성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보조연구원 17

2. 자문위원 선임 17

3. 작업 진행 경과 18

III.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사 개괄

1. 1950년부터 유신체제수립까지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23

2. 유신체제수립에서 1987년 6월항쟁까지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25

3. 1987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33

IV.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1. 정치·학생·통일·시민 분야

1) 개요 41

2) 정치·학생·통일·시민운동 시기별 개괄 41

3)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단체 62

4)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사건 72

5) 대구·경북 민주화운동 주요사적지 86

6) 관련 자료 109

7) 참고문헌 116

2005

이 보고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 유적지 대구·경북지역
기초조사 발굴작업 조사연구 용역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 민주화운동 조사연구부가 제출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대구·경북 민주화운동 유적지

2. 노동	
1) 개요	119
2)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사 시기별 개괄	120
3) 대구·경북지역 주요 노동운동 단체	137
4) 대구·경북지역 주요 노동운동 사건	152
5)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 주요 사적지	164
6) 첨부자료 목록	176
7) 참고 문헌	178
3. 농민	
1) 개요	179
2)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사 시기별 개괄	180
3) 대구·경북지역 주요 농민운동 단체	211
4) 대구·경북지역 주요 농민운동 사건	280
5)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 주요 사적지	307
6) 첨부 자료 목록	316
4. 교육·문화·여성	
《교육운동》	
1) 개요	317
2) 대구·경북지역 교육운동사 시기별 개괄	318
3) 참고 문헌	328
《문화운동》	
1) 개요	329
2) 대구·경북지역 문화운동사 시기별 개괄	330
3) 참고문헌	339
《여성운동》	
1) 개요	340
2) 대구·경북지역 여성운동사 시기별 개괄	341
3) 참고문헌	344
《대구·경북지역 교육·문화·여성운동 단체》	345
《대구·경북지역 교육·문화·여성운동 주요 사적지》	361
《첨부자료 목록》	368

■ 별첨 :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일지 373

민주화운동 유적지 대구·경북지역 기초조사 보고서를 내며

역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 재구성된 기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혹은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에 따라 역사는 그 의미를 달리하며, 때로 기억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반세기 걸쳐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온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복원하고 그 참된 의미를 이어가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민주화운동 유적을 발굴하고 이를 보존하는 일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찾아 이를 진정으로 계승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화운동을 오늘로 불러들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일에 다름 아닙니다.

시간은 언제나 기억을 흐리게 하며, 가끔은 기억의 근거 자체를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날의 기억, 그날의 공간이 사라지기 전에 역사적 공간을 되살려 나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노도와 같은 분노가 물결치던 곳, 가슴 아픈 수난의 현장, 기쁨으로 함께 부둥켜안고 눈물 흘렸던 자리.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조사하며 우리들은 바로 그 곳에 다시 서는 감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곳은 이미 과거가 아닌 오늘이었으며, 내일을 그리는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혹자가 말하듯 기억을 되살리는 투쟁, 즉 기억투쟁은 과거가 아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내일을 바르게 보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앞에 놓여있는 과제이듯이 우리들의 꿈 또한 아직 멀고 험한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우리 국민에게는 이를 향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쉼 없이 찾고 있는 그 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민주화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그날의 기억이 내일의 의지로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과 성취 모두를 국민적 자부심으로 승화시켜 더욱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발굴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일은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 나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며,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자산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해야 할 몫이며 동시에 민주화를 꿈꿔왔던 모든 이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유적지 조사 발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을 만들기 위한 시범조사를 시행한 후 계속해서 이번에는 대구·경북지역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전국을 9개권으로 나누어 전국 각지의 모든 유적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벌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적지를 관리 복원하는 다양한 방법 또한 연구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소중한 기억이 함께하는 뜻 깊은 공간이 국민의 삶 속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뜻있는 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굴 조사 작업에 참여해 아낌없는 수고를 다하신 대구사회연구소 등 대구·경북 민주화운동 조사연구부 성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 형 규

I. 사업의 개요와 수행 절차

1. 사업 취지와 내용

민주화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현재화, 미래화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대구·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 유적지에 대해 총괄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집적한다.

1)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인간의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이해를 달리하는 타자와 결합하여 사회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그로 인해 자연적, 사회적 자원들의 배분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 대립하게 되고, 그로부터 사회의 분열이 생기고 결국 물리적, 정신적 폭력으로 타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사회적인 억압, 착취, 차별과 배제가 발생한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반대해 사회 성원 모두에게 자율적인 삶을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발생하고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적 억압, 착취,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사회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¹⁾

민주주의는 흔히 기본적인 제도들 - 예컨대 시민적 자유, 주기적인 선거, 자유로운 정당간의 경쟁, 자율적 이익집단의 존재 등의 '절차적 최소요건' - 을 갖춘 하나의 정치체제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나 정치체제는 사회성원들 사이에 민주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는 구조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나 정치체제로만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이러한 제도나 체제는 그 자체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성원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만 비로소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민주주의는 사회성원들에게 평등하게 각자의 삶의 자율성을 향유하게 보장하는 제도나 체제이자 동시에 자율적이며 공화(共和)적인 '삶의 방식' 즉 민주적인 공생의 문화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양자를 통합적으로 살필 때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당해 사회의 사회구조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성원들의 사회성의 발달상태에 직접 연관되는 까닭에 그 불변의 완결성을 말하기가 어렵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한 적은 없었다. 인류 역사에서 사회적 억압과 착취, 차별이 존재하지 않은 시기는 없었고, 민주주의는 언제나 이러한 경향성과 대결하는 가운데 후퇴하거나 확대, 발전해 왔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완성물로서가 아니라 과정으로, 또한 구체적인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억압, 착취,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가변적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점에 주목하면 민주주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복합적인 계급적·사회적 투쟁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²⁾

1) 손호철,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개념과 한국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학술단체협의회 주최 2003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3.

2) 조희연, 「한국민주주의의 전개와 구조와 쟁점 및 발전과제」, 『한국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도서출판 한가람) 2003. 사회적 투쟁이란 "계급적 투쟁을 중심으로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투쟁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투쟁을 포함한다"

민주주의는 이를 확보하고 실천하는 민주화운동을 핵심적인 계기로 내포한다. 민주화운동 없이는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 민주화는 권위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비민주적인 상태를 민주주의로 변화시키는 동태적 과정이다. 민주화운동은 이러한 민주화를 촉발시키고 확대하는 개별적 또는 집합적 행동과 운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 참고가 되는 것이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동 시행령을 보면 민주화운동을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 보상법에서는 민주화운동을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에서는 그 항거의 내용을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 자에 의해서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령은 민주화운동을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자유와 권리를 신장한 활동, 혹은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민주화운동 모두를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설정하면서도 주로는 군사독재에 대해선 철저적 민주주의 내지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벌여온 정치적 민주화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서 정치적 민주화운동에 보다 각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의 민주화가 경제, 생산, 언론, 교육, 문화 등 여타 사회영역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억압, 착취,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민주화운동 또한 삶의 전영역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운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 생산, 언론, 교육, 문화 등등 여타 영역의 민주화를 대신하거나 자동적으로 결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영역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운동과 연관하여 그 나름의 민주화운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그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다시 정치영역의 민주화운동을 확대, 심화시키는 원인과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법령이 담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개념은 확대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운동을 상호보완적인 네 가지의 민주화운동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참고하는 것은 유익하다.³⁾ 이 관점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은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째는 권위주의적 지배나 독재에 항거해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민주화운동이다. 둘째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보존되어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관련된

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3) 손호철, 앞의 논문, 2003.

사회경제적 권리를 지키려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운동이다. 셋째는 자본주의의 "작업장 독재"에 저항해 생산자들이 스스로 주요한 결정을 하는 생산자 자주관리나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주요한 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생산자 민주화운동이다. 넷째는 포스트주의가 관심을 갖는 일상의 민주화운동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국가나 자본가 같은 거대권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들에는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보면 다양한 일상의 삶의 제도화된 사회적 관계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문제로 연결된다. 물론 이러한 분류나 관점을 그대로 도입해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을 연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확대,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은 틀림없다.

2) 대구·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사적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의 방법과 범위

이 조사는 민주화운동사적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이고, 대상 지역은 대구와 경상북도이며, 대상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시기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혹은 파시즘적 독재권력이 출현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야만적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억압, 부정했던 시기였고, 그에 맞서 민주화 투쟁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확대, 발전하여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6·10항쟁, 6월노동자대투쟁 등등을 일으켰던 시기였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마침내 민선 민간정부를 수립하였던 것이며, 나아가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형성한 제반 민주적 절차와 규칙들이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민주화 공고화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 또한 이와 같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일어나고 발전하였으며, 영역별로는 정치적 민주화운동에서 사회경제적 민주화운동, 일상의 민주화운동으로 그 폭을 넓혀 왔다.

그러면서도 대구·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의 일반적 흐름과는 다소 다른 이 지역 나름의 특수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첫째, 대구·경북지역은 한국전쟁기에 인민군에 의해 점령당하지 않았거나 점령기간이 짧은 지역이 많아서 동족상잔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로 인해 전쟁이후 진보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수 존재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정치적 정서도 1956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진보당 조봉암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승만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야당세가 강하였다.⁴⁾

둘째, 이러한 진보적 역량 덕분에 4월혁명 시기에 대구·경북지역은 교원노조운동과 자주평화통일운동을 위시해 정치민주화운동과 노조민주화운동, 학원민주화운동, 2대약법 반대운동 등등에서 전국적으로 선두에 서는 주도성을 발휘하였다.

셋째, 대구지역의 학생운동은 2·28의거의 경험과 4월혁명기에 두각을 나타냈던 진보적 활동가들의 지도와 영향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였으며, 이 지역의

4)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역사비평사) 2000, p.158

민주화운동은 군정연장반대운동, 한일회담 반대투쟁, 6·8부정선거규탄투쟁, 삼선개헌반투쟁 등등에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넷째, 그러나 동시에 이로 인해 대구지역의 진보적 지도역량은 독재권력의 집중적인 공격목표물이 되어 1964년에 인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고, 1974년의 제 2차 인혁당 사건 및 그와 연루된 민청학련 사건을 통해 다수가 사형당하고 무기형을 받는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다섯째, 대구·경북지역은 박정희의 장기집권에 이어 전두환, 노태우로 승계되는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권위주의정권을 지지하는 반민주적 정서가 기층대중 속에 두텁게 형성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정책을 통해 구미공단, 포항공단이 조성하는 등 대구·경북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 출신의 전두환, 노태우가 군부쿠데타로 권력을 이어가게 되고, 그로부터 특혜를 받은 각계의 지역출신의 엘리트들이 지역 여론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보수적 정서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켰다. 이러한 보수적 정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악용되기 시작한 지역감정과 결합되어 지역연고 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식의 맹목적 지지로까지 강화되어 왔다. 권위주의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지지, 추종하는 보수적 정서와 지역감정의 형성은 1970년대 후반 이래 대구·경북지역에서 정치적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가 되었다.

여섯째, 반민주적인 보수적 정서가 지역사회 전반에 자리 잡게 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은 비판적 의식을 가진 노동자, 농민, 학생층 일부와 교수, 교사, 문화인 등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게 된다. 따라서 그 전개양상도 다른 지역에 비해 기층 대중의 참가나 지지도가 낮고 대신 선각적인 지도부나 지식인이 주도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

대구·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 사적지 선정에 위한 기초조사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이 대구·경북지역에서 특수하게 구체화되는 맥락을 추적하고 정리하면서 권위주의적 또는 파시즘적 권력에 의해 발생한 모든 사회적 억압, 착취,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을 조사, 발굴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정치, 통일, 노동, 농업, 교육, 여성운동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또한 민주화운동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부문운동의 상호 연관성을 해명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조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권장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포괄주의적·최대주의적인 접근방식(“반독재투쟁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투쟁”)을 따르고 있다. 끝으로 이 조사는 단기간에 수행되어야 하는 물리적 제약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대상 시기를 전형적인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했던 한국전쟁 이후부터 김영삼 정권 출범 이전시기까지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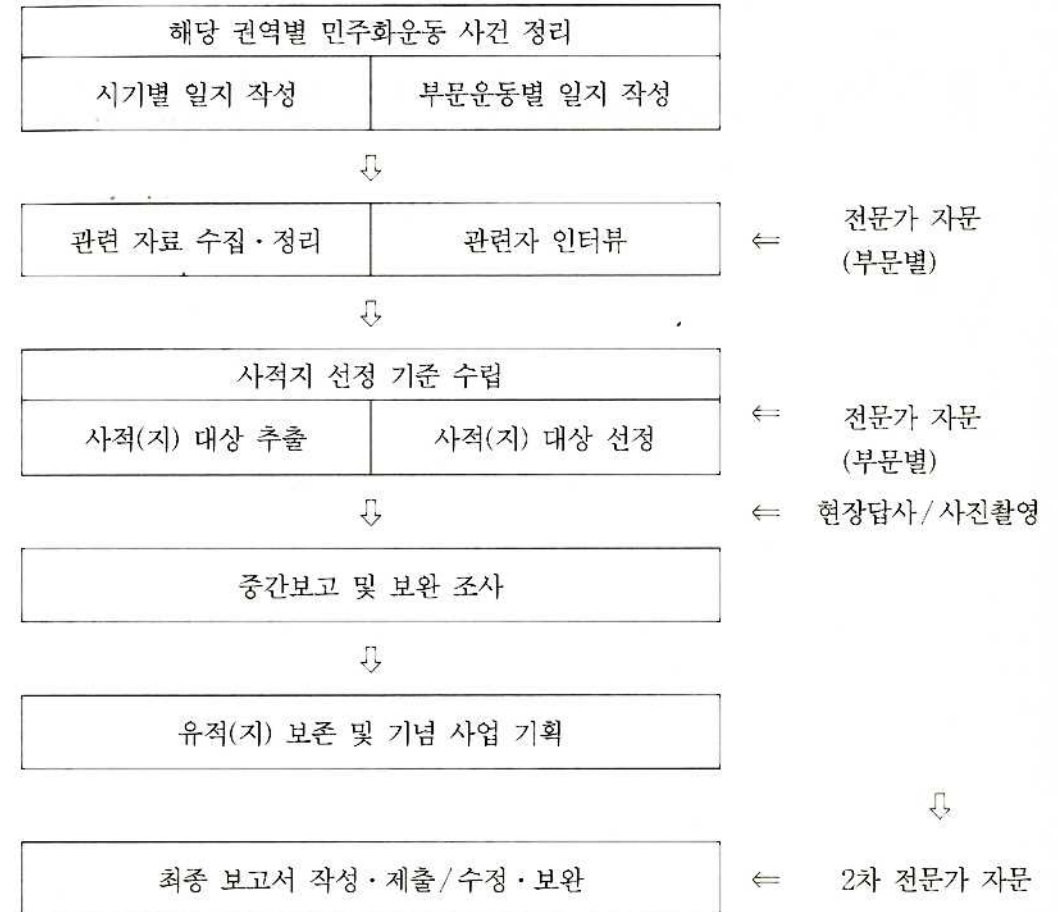
3)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활용 방향

* 조사지역의 사건별, 장소별 사적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며 지역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민주화운동의 사건일지를 작성하며, 민주화운동 관련단체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써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총괄 조사·정리한다.

* 이 기초조사는 향후 민주화운동 관련사업 중 유적지 선정사업, 탐방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념설치물 설치사업, 민주화운동사전편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2. 사업 수행 절차 : 구체적인 조사·작업 흐름도



II. 작업 진행 경과:
현재까지 본 연구팀의 구성과 논의과정

1. 작업팀의 구성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보조연구원

	이름	소속	비고
연구책임자	이윤갑	계명대 사학과 교수	작업총괄책임
공동연구원	김일수	대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치·시민운동
	이재성	대구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농민운동
	임채도	대구사회연구소 연구원	노동·빈민운동
보조연구원	윤규홍	대구사회연구소 연구원	교육·문화운동
	김성애	대구사회연구소 연구원	학술·여성운동
	구경모	대구사회연구소 연구원	학생·시민운동

2. 자문위원 선임

이름	활동단체	자문분야
강창덕	민주자주통일중앙협의회	정치·통일운동
백현국	5·18동지회	정치·시민운동
신창일	대구참여연대	학생·시민운동
이호철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농민운동
함종호	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운동
정우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운동
김찬수	민주노동당	노동운동
이도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운동
이균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부	문화·예술운동
정경숙	대구여성사회교육원	여성운동

3. 작업 진행 경과

- * 2003년 10월 2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사적(지)조사·발굴 사업 기획안 제출
- * 2003년 11월 2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용역계약
- * 2003년 12월 1일(월) 제1차 회의
 - 작업의 목적과 내용, 범위와 수행 원칙, 일정 등에 대해 논의
 - 기존 조사보고서의 방법론을 검토하고, 그 바탕 위에서 독자적인 조사, 연구방법을 개발하기로 함.
 - 조사연구팀 구성 및 역할 분담
 - 전체 총괄 - 이윤갑(책임연구원), 구경모(간사), 이상울(대구사회연구소 사무국장)
 - I 팀 - 정치, 통일, 시민운동 : 김일수(공동연구원), 구경모(보조연구원)
 - II 팀 - 농민, 노동, 도시빈민운동 : 이재성(공동연구원), 임채도(공동연구원)
 - III 팀 - 교육, 문화, 학술, 여성운동: 윤규홍(보조연구원), 김성애(보조연구원)
- * 2003년 12월 8일(월) 제2차 회의
 - <서울·경인지역 민주화운동 사적지 조사보고서>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사적지 조사보고서>를 검토
 -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화운동, 사건, 단체 조사에 대한 부문별 기준 논의
- * 2003년 12월 19일(목) 제3차 회의
 - 부문별로 1950~60년대 민주화운동 일지 조사결과 보고
 -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 검토
- * 2003년 12월 29일(월) 제4차 회의
 - 부문별로 1970~90년대의 민주화운동 일지 조사결과 보고
 -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화운동 조사, 발굴 기준 논의
 - 부문별로 민주화운동, 단체, 사건 조사 및 발굴계획 일정 협의
- * 2004년 1월 12일(월) 제5차 회의
 - 부문별 조사 진척상황보고 및 공동조사 사항에 대한 협의
 - 부문별 지역 내 주요 활동가 조사와 자문위원 위촉 건 협의
 - 예산 집행 원칙에 대해 협의

- * 2004년 1월 26일(월) 제6차 회의
 - 부문별 조사 진척상황 보고
- * 2004년 2월 9일(월) 제7차 회의
 - 전체 조사 진행상황 점검 및 문제점 검토
 - 중간보고회 일정 및 진행방식, 참가자에 대한 협의
- * 2004년 2월 23일(월) 제8차 회의
 - 중간보고서 내용 검토와 수정, 보완
 - 중간보고회 준비상황 점검
- * 2004년 2월 27일(금) 중간보고회
 -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북대 교수회관 3층 회의실에서 진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실무진, 자문위원, 대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본 조사사업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 중간보고서 발표와 참가자 논평 순으로 진행
 - 조사활동의 보완점에 대해 의견 수렴
- * 2004년 3월 10일(수) 제9차 회의
 - 중간보고회 평가와 분야별 조사활동 보완점 정리
 - 최종보고회까지의 활동계획 협의
- * 2004년 3월 24일(수) 제10차 회의
 - 3월말까지 관련자 인터뷰, 문헌조사를 완료하기로 함.
 - 4월에는 분야별 보고서를 정리하여 4월 20일까지 초고집필 완료
- * 2004년 4월 7일(수) 제11차 회의
 - 최종 보고회 일정 조정 협의
 - 조사결과 정리작업 현황 점검 및 보완점 검토
- * 2004년 4월 24일(토) 제12차 회의
 - 분야별 최종보고서 초고안 내용검토 및 보완점 논의
 - 분야별로 작성된 민주화운동일지를 상호 연관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
 - 초고 수정, 보완 후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내용검토를 요청하기로 결정

* 2004년 5월 4일(화) 제13차 회의

- 분야별 민주화운동 정리에 기초해 대구·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 일반의 시기별 전개과정을 정리하기로 협의
- 한국전쟁이후~1972년 10월유신선포까지 : 김일수 연구원
- 유신체제성립~1987년 6월항쟁까지 : 이재성 연구원
- 1987년 6월항쟁이후 현재까지 : 임채도 연구원
- 분야별 민주화운동을 1) 개요 2) 소시기별 민주화운동사 서술 3) 민주화운동 단체 4) 민주화운동 사건 순서로 정리하기로 결정함.
- 개별 사적지 선정방식과 민주화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 답사코스를 선정하는 문제를 협의

* 2004년 5월 12일(수) 제14차 회의

- 최종보고회 일정 변경을 협의.(5월 22일에서 25일로 변경)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집 작성 방안을 협의
- 최종보고서 제출 일정과 보고서 편집, 제작방안을 협의

* 2004년 5월 19일(수) 제15차 회의

- 최종보고회 준비 상황 점검
- 분야별 자문위원의 의견을 검토하고 원고 수정, 보완사항에 대해 협의
- 민주화운동 기념사적지 후보지 확정

* 2004년 5월 25일(화) 최종보고회

* 2004년 6월 1일(화) 제16차 회의

- 최종 보고서 수정·보완 사항 검토
- 최종 보고서 편집·발간을 위한 점검

Ⅲ.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사 개괄

1. 1950년부터 유신체제수립까지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한반도 분단과 한국 정부수립 이래 이승만정권은 공업생산이 일제말기에 비해 20%를 밑돌 정도로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서도 1949년 중순경 국회프락치 사건, 김구 암살, 반민특위 해체 등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켜 나갔다. 게다가 6·25전쟁과 전쟁 이후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3·15부정선거 등을 획책하여 권력을 종신토록 독점하고 독재화해 나갔다. 이승만정권의 지배 세력은 반공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여 극우화하였다.

반공극우정책에 입각한 이승만 독재 권력은 195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정치권내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반독재운동에 부딪혔고, 국민들로부터도 지지기반을 급속히 상실해 나갔다. 이때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민주당과 진보당의 정치세력이 형성되었고, 국민들도 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정치성향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지역의 이승만독재정권에 대한 민주화운동은 언론을 통한 이승만정권의 학원 동원에 대한 반대가 매일신문습격사건으로 나타났고, 이승만정권의 부정선거 반대에 대한 저항, 2·4보안법반대 투쟁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958년 12월 25일 민주당경북도당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파동에 항의하는 가두시위를 펼쳤다. 또 1959년 1월 14일 민주당경북도당은 재차 항의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임문석 도당위원장 등 10여 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권은 6·25전쟁 이후 멸공, 북진통일을 내세우며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함께 대한노총이라는 어용적 기구를 이용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대해 대구에서는 노동자의 저항과 노동조합 결성이 이어졌다. 1956년의 대한방직 노동자의 해고반대 투쟁과 이 과정에서 새로이 대한노총 대구지구연맹이 결성되었던 것이다. 또한 1959년에는 170여개 노조, 16명의 조합원을 규합하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어 대한노총을 결성하였다. 이 두 단체는 다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하여 노동운동의 신기운을 이루었다.

이러한 정치흐름은 1960년 2·28학생운동으로 이어 이승만독재 정권의 학원 사용(私用)을 막았고, 이 운동은 3·15를 거쳐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4·19혁명시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독재에 맞선 민주주의운동이 촉발되었고, 민주·민족운동의 출발점이었다. 4·19혁명은 지배계급의 교체 없이 정권의 교체만 이루어졌다는 점과 친일파 숙청과 독재세력을 일소하지 못함으로써 미완성의 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운동' 혹은 '항쟁'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대구·경북지역의 4·19혁명은 3월 16일부터 시위가 시작되어 4월 19일 시위를 거치면서 대학교수들도 시위에 참가하였다. 4·19민주운동시기 학생층은 자치학생회 건립운동, 어용교사 축출과 부패재단 정화운동, 교원노조 동조 및 지지 활동 등의 학원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치개혁 차원에서 4대 국회 해산 요구, 반민주세력 및 부패세력 척결운동도 전개하였다.

4·19 민주운동은 통일운동으로 이어졌다. 대구에서는 1960년 10월경에 경북시국대책위원회라는 자생적 통일운동 조직이 결성되었고, 이 단체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이하 '민자통')

의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명칭을 경북민족통일연맹으로 변경하고 '민족·자주·평주 민주적인 조국통일을 기한다'는 민자통의 통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경북민족통일연맹은 청년조직으로 경북민주민족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 경북민주민족청년동맹은 1961년 1월 영남일보 등에 민족통일에 관한 호소문을 신는 동시에 2월 25일 대구역 광장에서 통일촉진운동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통일사회당과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 통일민주청년동맹이 결성되어 중립화통일운동을 펼쳤다. 또한 학생층도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60년 11월 11일 경북대에서는 민족통일촉진학생연구회가 결성되었고, 1961년 4월에 경북고등학교에서는 민족통일경북고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61년 5월 11일에는 대구지역 학생들이 남북학생회담지대회를 개최하였고, 회회를 마친 뒤에는 침묵대모를 벌였다.

그리고 1960년 6월 경북과학사자유족회가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이 운동은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군인, 경찰, 반공단체 등에 의해 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교도소 수감자중 기결수 및 미결수 등과 일반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법치국가의 정의에 의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기대한 활동이었다.

4·19시기에 노동운동은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노조가 결성되는 등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구지역은 제일모직 노조건설투쟁, 대구를 시발로 한 교원노조운동, 대구일보 등 지방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언론노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7·29 선거를 통해 집권한 장면의 민주당 정권이 4월 혁명을 계기로 분출된 민족·민주운동을 제압하고자 소위 이대 법안(데모 규제법, 반공 특별법)을 실시하고자 할 때 대구는 그것에 반대하는 중심에서 있었다. 곧 이대 악법 반대 공동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여 민주당 정권 타도의 소리를 높여 갔다. 그리고 장면 정권이 경제 개발을 위해 한미 경제협정을 맺으려 할 때, 그 협정을 미국의 한국 사회에 대한 내정 간섭과 예속을 용인하는 불평등 협정이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높았다. 이렇듯 민족·민주운동이 강하게 대두하고 장면 정권에 대한 비판성이 강했던 대구 사회는 1961년경 소위 4월 위기설, 농민 봉기설의 진원지가 되어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의 발생은 4·19혁명에 따른 민주·민족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억압하여 군부독재의 시대를 열었다. 1960년대 군사정권아래 대구·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은 몇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되었다. 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군정연장반대운동, 한일회담반대운동, 6·8부정선거 항의, 삼선개헌 반대투쟁 등 군부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이 지속되었다. 군정연장반대운동은 지역 야당세력이 3·16성명철회관철경북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달성·고령지구, 경주·월성지구 등 지방조직을 확대하면서 전개되었다.

한일회담반대운동은 1964년 3월 25일에 계명대, 경북대, 대구대, 한사대 등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자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등의 학생들이 4월 21일부터 한일협정비준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7월 10일 지역의 야권은 7월 10일에 대구종합운동장에서 한일협정 인준을 반대하는 '매국 조약비준반대국민성토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학교수들도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하

였다.

6·8부정선거규탄대회는 1967년 6월 8일에 치러진 제7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탄대회였는데, 대구에서는 6월 14일 대구대생의 시위에 이어 계명대, 경북대학으로 확대되었고, 7월 3일 계명대에서 시내 6개 대학 4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6·8부정선거규탄 경북학생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삼선개헌 반대투쟁은 보수정치인과 재야 운동세력이 연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컸다. 1960년대 학생들이 전개한 민주운동 중 삼선개헌반대투쟁이 가장 격렬하였다. 이 운동 과정에서 경북대는 정사회를 비롯한 학내 이념동아리 등이 승인 취소되고, 반면 계명대는 호헌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970년 말 대학가에서는 교련강화 및 교련전면 폐지투쟁이 전개되었다.

2. 유신체제수립에서 1987년 6월항쟁까지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1970년대 한국사회의 사회운동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반파시즘 민주화투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유신헌법 공포 직후의 일시적인 잠복기를 지나 1973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들의 자유민주체제 확립을 요구하는 시위는 유신철폐 시위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전국의 각 대학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재야지식인, 종교인,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유신체제 반대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시기 학생운동은 1974년에 들어서면서 개별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비조직성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적인 투쟁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결성하여 한 단계 높은 투쟁으로 이행하였다. 민청학련은 이전까지의 고립분산적이고 지도가 보장되지 않았던 시위 일변도의 학생운동이 민중의 생존권 투쟁과 조직적 연계를 모색하면서 전국 차원의 대중봉기를 예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 시도가 사전에 누설되면서 주도 학생들이 수사기관의 탄압을 받아 공동연합시위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몇몇 대학에서 소규모 시위로 그치고 말았다. 학생들의 이러한 시도는 이른바 민청학련사건과 제2차 인혁당 사건으로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1970년대 대구·경북지역의 유신체제기 민주화과정은 크게 유신체제기간과 5·18민주항쟁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유신체제기간의 경우도 몇 단계로 구분 가능한데, 대구의 경우 유신체제 직전까지도 야권을 중심으로 한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적 권력장기화에 대한 반대운동이 벌어졌다. 1971년 9월 현대예식장에서 지자체추진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10월에는 민주수호협의회경북지부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야권의 활동은 유신체제 성립기 반유신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결과 1972년 1월말 육군보안사는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최영호 경북대 교수를 포함한 대남간첩 7개망 2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하는 등 공안통치분위기를 자아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신헌법이 공포된 직후를 거쳐 1973년부터 1977년까지인데, 이 때에는 유신 체제 철폐투쟁의 형성기라 할 수 있다.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생의 첫 유신반대운동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은 다른 대학과 지방에 유신반대운동이 파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간에는 공권력의 학원사찰 반대와 학원자율, 언론자유 등이 주요 요구조건이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1973년 10월말 경북대 법대생이 언론의 중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계기로 계명대, 영남대, 효성여대, 영남신학교 등 대구의 각 대학가에서 12월말까지 반유신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제기된 구호는 언론자유보장, 학원사찰 즉각 중지, 유신반대 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반유신운동은 1974년에 접어들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경북대의 경우 반독재민주국구투쟁위원회의 명의로 반독재 민주국구 선언문이 발표되는가 하면 각 대학에서도 구호 제정 수준에서 선언문을 작성 발표하는 수준으로 진전되었다. 이에 경북대와 계명대 등 지역 각 대학 학생들의 구속사태가 줄을 이었다.

이 시기 대구·경북지역에는 4·19혁명기간에 축적되고, 군부정권에서도 보존되어온 민주·통일운동의 역량이 통일혁명당 재건, 민청학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탄압을 받게 되었다. 1973년 12월말 서울에서 재야인사 중심으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한 반유신운동이 전개되면서, 재야정치세력의 활동도 활성화되었다. 이에 1974년 당시 대구와 부산·광주지역의 민주인사들이 박정희정권 결사반대의 취지아래 경락연구회(經絡研究會)를 결성하였다. 3월 중앙정보부가 통혁당재건사건을 발표하였고, 4월에는 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재건위원회를 지목하였다. 인혁당사건은 다음해인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 8명, 무기 7명, 징역 20년 4명, 징역 15년 판결이 내려졌고, 박정희정권은 다음날인 4월 9일 사형을 집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구지역 대학가에선 반유신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이 계속 발표되었고, 이에 당국은 선언문 발표에 관련된 학생을 구속수감하는 탄압을 강화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1978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은 정권 퇴진, 유신 철폐투쟁의 고양기라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대학 내에 예목회(경북대), 여명회(경북대), 전통문화연구회(계명대), 전통문화연구회(영남대) 등의 이념동아리가 등장하고, 기독교의 도시산업 선교활동과 가톨릭의 JOC 활동 그리고 대학생 불교 모임인 대각회를 중심으로 종교 및 인권운동이 펼쳐지면서 학원-종교-노동(또는 농촌)이 운동차원에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유신철폐, 군부정권 퇴진 등의 운동이 고양될 수 있었다.

대학가의 유신반대운동은 긴급조치 해제, 학원자유 보장 등을 구호로 벌여졌으며, 경북대의 경우 1978년 11월 두 차례에 걸친 민주국구선언문 사태로 확대되었다. 계명대와 영남대의 경우 1979년 5월 대학축제 때 연극반의 연극사태와 탈춤사건이 각각 발생하였다. 각 대학별로 반유신 운동을 전개해오던 대구지역 각 대학은 1979년 9월에 이르러 3개 대학 반유신운동 연합시위를 개최하고, <사회정의구현을 위한 경북학생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학생층의 반유신운동의 집중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측은 임시휴교 조치를 취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10월에도 반유신운동을 계속하였다.

10·26사태 이후 1980년에 접어들어 대구지역 각 대학은 '80년의 봄'을 기대하면서 유신체제

아래 강화되었던 학도호국단을 철폐하고 자율적 학생회를 구성하려는 학원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1980년 2월 계명대는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여 학원민주화실천위원회를 결성하여 총학생회조직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대구지역 최초로 대자보 건설 투쟁을 전개하였다. 4월 경북대는 4·19 제20주년 기념제를 개최하여 제2의 4·19선언문을 채택하여, 학원민주화운동을 추진하려 하였다. 4월 영남대도 학원민주화를 위한 공청회와 집회를 거의 매일 열었다. 또한 계명대의 병영집체훈련 반대 유인물 배포사건, 경북대의 구속학생석방위원회의 결성 등이 벌어졌다. 5월 계명대가 대구지역에서 80년대 접어들어 처음으로 박헌채 강연 후 '계엄철폐', '유신잔당 척결'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전개하였고, 축제기간을 민주화투쟁기간으로 선포하며 전두환퇴진, 언론자유보장, 노동삼권보장을 요구하였다.

5월 경북대도 복교생을 중심으로 민주화투쟁협의회를 구성하여 총학생회와 연합으로 비상계엄해제, 노동 3권 보장 등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5월 14일에는 대구지역의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한사대 등의 대학이 비상계엄해제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량이 파괴되는 등 시위가 매우 격렬하였다. 5월 16일에는 전국 55개 대학 학생대표가 모여 제1회 전국대학총학생회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현시국과 학생운동 방향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여기에 대구의 경북대, 계명대 등이 참가하였다.

'80년의 봄'에 대구의 대학가는 학원자율화, 학도호국단철폐, 어용교수 퇴진, 사학의 족벌체제 퇴진, 계엄 철폐, 병영집체훈련, 민주화촉진 등의 대학사회의 민주화운동이 펼쳐졌던 것이다.

1960~70년대의 고도의 자본축적으로 노동자계급은 양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계급으로 등장했지만,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 계급적인 이해를 표출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제도를 가지지 못한 거의 무권리한 상태였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청계천 평화시장 섬유노동자 전태일이 분신사살한 사건을 계기로 초기적인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 이후 극단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즉자적 저항과 같은 형태로 주로 여성노동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결성투쟁, 노조민주화투쟁 등이 진전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노동운동이 주로 자연발생적이고 일회적인 투쟁의 형태로 폭발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스스로의 경제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조직적 성격을 띠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 및 다른 사회운동 세력들이 민주노조들의 투쟁에 직간접적으로 연대하여 투쟁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반파시즘운동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는 민주화운동의 민주운동적 성격을 보다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70년대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은 초보적인 노동3권 마저 박탈당한 상황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와 법적 제도적 무권리 상태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항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상황은 조금도 변화될 기미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뚫고 솟구친 노동자들의 저항은 따라서 비조직적이며 자생적, 때로 극단적, 폭발적 양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아리아악기 쟁의사태는 이 시기의 대표적 사례이다. 1978년 1월 21일 저임금과 노동자 구타사건에 불만을 품은 노조분회장 등 노동자 5명이 당시 실질적 경영주

었던 부사장 정구용의 집에 과도를 들고 들어가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8시간 후에 농성을 풀고 구속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아리아 악기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뿐 아니라 경영주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 교회장로였던 경영주의 비신도에 대한 부당처우, 강제예배 등 심각한 종교탄압행위까지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70년대 말까지 군사정권의 강권 하에서 대구지역 노동운동은 조직적 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한 가운데 가혹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자생적 산발적 투쟁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비합법 전위조직운동이 궤멸되면서 입은 지역차원의 운동적 손실은 엄중한 것이었다.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한 사건 관련 가족들의 힘겨운 진상규명과 석방투쟁이 고립된 상황에서 한 가닥 투쟁의 빛을 발할 따름이었다.

농지개혁으로 대부분 영세자작농이 된 농민층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독재정권의 표방으로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러 있었으나 1970년대 초반 한국가톨릭농민회 결성과 1970년대 중반 이후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농민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YWCA 연맹의 농촌개발사업 등으로 초기 형태의 농민운동이 촉발되기 시작하였다. 가톨릭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전개된 농협민주화투쟁, 함평고구마사건, 안동농민회사건(일명 오원춘 사건), 경지정리사건투쟁, 농지세개선투쟁, 새마을사업 강제집행 반대투쟁, 저농산물 가격정책 반대투쟁, 농민운동 탄압저항투쟁, 피해보상투쟁 등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아직 자본주의화에 의한 독점자본의 수탈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자주적인 조직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제5공화국 권력이 체제를 정비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 전반은 극심한 탄압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노동계 정화조치, 노동관계법 개악, 기업별 노조강제 등으로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청계피복, 원풍모방 등 민주노조를 폭력적으로 해체시켜나갔다. 또한 서울의 봄 정국에서 일시적으로 부활하였던 학생회를 다시 학도호국단 체제로 바꾸어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민주교수들의 해직, 학생들의 구속, 제적 등으로 학생운동을 압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을 뚫고 1981년부터 학생들의 반독재 시위가 재개되어 1982년 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9월 1만여 명의 대규모 연합가두시위, 10월 전남대생 1만여 명의 시위 등의 발생하는 등 서서히 그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쿠데타 직후 위축되었던 재야운동도 1983년 9월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을 결성하여 공개적이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의 학생운동은 70년대까지의 학생운동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전환이 일어났다. 첫째, 절차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70년대까지의 소시민적 운동을 탈피하여 한국사회의 변혁을 통한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학생운동 내부에서 전개된 CNP(시민혁명, 민족혁명, 민중혁명) 논쟁을 통해 잘 표현되었다. 둘째, 민중과의 연대, 특히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민중지원연대투쟁이 시도되었다. 셋째, 점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군부독재정권과 미국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투쟁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전국적 민주화운동의 지형에서 80년대 대구·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은 학생층을 중심으로 '조정기'(80~83), '조직화 시기'(84~87), '고양기'(87년) 등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조정기(1980~1983)인데, 1970년 후반 실천투쟁적 관점과 이론학습적 관점 등 두 흐름으로 진행되어오던 대구지역 학생운동은 5·18항쟁을 거치면서 지도부가 강제 징집되면서 침잠과 조직재건을 반복하였다. 광주항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군부에 대한 학생층의 의식화 방식이 크게 변화되었다. 5·18민중항쟁을 거치면서 조정기를 맞게 된 지역의 대학가는 1981년 신학기부터 전두환 정권을 반대하는 반정부유인물 살포 투쟁이 1982년부터 계속 전개되었다. 이에 1983년까지 학생과 노동자를 연결하여 외형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생층 내부의 의지를 통일시키기 위한 정치경제학 학습을 진행시켰다. 그 가운데 외형적으로는 역량 강화를 꾀했고, 내부적으로는 의지의 통일을 다졌으며,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미국과 제3세계를 바라보는 학습을 진행하였다.

둘째, 조직화 시기(1984~1987)는 1984년부터 사면된 학생운동 지도부들이 속속 학교로 돌아오면서 학생운동 조직 재건을 통해 학원민주화쟁취를 내세우며 영역을 확대한 과정이다.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해 1984년 5월 영남대는 영대자율화추진위원회호를 결성하였다가 영대민주화추진위원회로 변경하여 공청회 개최, 4·19추모집회, 춤과 노래 보급, 화형식, 광주학살사건 사진 폭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생회 건설을 바탕으로 1984년 5월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 등 3개 대학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전두환매국방일반대로 규정하여 연합시위 전개하였다. 그리고 11월 없어진 학생의 날에 즈음하여 지역의 각 대학은 학생의 날 부활 연합기념식을 열고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11월 13일 각 대학생은 영남대 사회대 광장에서 학도호국단 해체식을 갖고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26일에는 계명대 빌라도 광장에서 시국성토회를 개최하였다.

1985년 4월 10일 경북대에서는 경북·영남·계명·대구대생 3백여 명이 4개 대학연합학원민주화쟁취대회를 개최하였고, 일주일 후인 4월 17일 고려대에서 전국학생총연합결성식 및 강제징집희생자추모비 제막식을 가진 후 대구지역 학생들의 총학생회 부활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그리하여 5월 대구지역 대학생들은 민정당 대구 제2지구당 사무실에 대학생 7명이 최루탄 3개를 던진데 이어 민정당 대구 제3지구당 사무실에 대학생 20여명이 최루탄가스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6월 들어 <대구민주투쟁학우일동> 명의로 '언론의 각성촉구투쟁을 전개하며'라는 유인물을 돌리며, KBS방송국에 화염병과 최루탄을 투척하였다. 1985년 10월부터 대구지역 대학가에는 학원탄압저지투쟁위원회(경북대)가 결성되었으며, 1986년에 접어들어 경북대 학생들이 민주개헌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는가 하면,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4월에는 대구 아세아극장에서는 직선제 개헌추진대회가 개최되는 등 민주개헌운동이 전개되었다.

셋째, 고양기였던 1987년에는 재야에서 민주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가 결성되어 민주개헌과 민족통일운동의 중심기관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유화국면을 맞아 노동운동도 활발한 모습으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대구지역에서는 쌍마섬유, 한일섬유, 중앙섬유, 아세아공업, 동명산업, 한철 등에서 노조결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981년부터 1990년 12월 말까지 대구지역 노동쟁의의 발생은 총 502건이다. 이 가운데 1987년 6월 항쟁 이후의 노동쟁의가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980년 이후 1987년까지 지역 노동운동의 암울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1987년 이후 본격적인 노동운동의 진출을 준비하는 합법, 비합법적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서 오히려 노동운동 이론과 학습이 확산되고, 사상투쟁과 현장실천을 병행하면서 건설한 지역 노동운동가들이 배출되었으며, 엄혹한 탄압을 뚫고 전진하는 대구지역 노동운동의 전투적 기풍이 마련된 시기로 지역 운동사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시기이다. 이상과 같은 80년대 전반기의 주요 흐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가운데 발생한 1982년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은 지역 사회운동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공안당국은 재야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룹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검속을 자해하였으며 심지어 야학에 다니는 노동자들까지 조사했다. 얼어붙은 대구지역 민중운동은 1983년 말 전두환 정권의 이른바 '유화조치' 이후 조금씩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학원자율화 조치와 함께 신규노조 설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학생운동뿐 아니라 지역 노동운동에 새로운 기운이 일어났다.

이 시기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노동운동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생운동 경험자들의 노동현장으로서의 '투신'과정이다. 광주항쟁 이후 대구지역 각 대학의 학생운동 그룹들은 개별적 혹은 조직적으로 노동현장으로의 '존재이전'을 고민하게 되고 1986년 이후 대구지역의 주요 노동투쟁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한편,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연계하는 통로로서 '야학운동'은 노동자들에게 검정고시 졸업장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역할보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의식과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불만을 체계적으로 의식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강학(대학생교사)'들 또한 관념적인 현실인식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계기가 되었다.

대구지역의 학생운동 출신 현장투신그룹은 1984년경부터 대노협 창립(1988년)시기까지 활동한 이른바 네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그룹들은 뚜렷한 운동노선에 의한 이념적 조직적 결합이라기보다는 출신학교와 개인적 인맥관계로 뭉친 경향이 강했다.

둘째, 종교계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소모임들이다. 대구가톨릭사목과 가톨릭노동청년회(JOC), 그리고 이웃교회, 작은 교회 등 민중교회운동이 대표적인데, 학생운동 출신그룹들의 현장투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 노동자 교육과 노동 상담활동, 자발적 소모임 활동을 통해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의 본격적 진출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했다.

셋째, 1980년대 대구지역 노동운동에 있어 노동자들의 자발적 자생적 투쟁이다. 조직적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확산되는데 있어 지식인들의 현장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부인하기 힘들지만, 또한 과대하게 평가되어서도 곤란하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권리 상태에 처한 노동자들의 자생적, 자구적 저항은 때로 그 기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의식적 조직적 노동운동을

가능케 한 조건이었음을 강조해야 한다. 실제로, 대구지역에서 발발한, 1984년 5월 24일 택시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과 한국경전기 권영숙씨 부당해고 반대투쟁)은 당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가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택시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으로 완강하게 전개되어, 지하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던 당시 현장그룹 활동가들과 학생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1985년 서울 구로공단연대파업투쟁은 대구지역 학생운동 출신 현장그룹들에게도 생생한 투쟁교과서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단호하고 조직적인 실천과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의 필요성을 확산시켰다.

1986년 1월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대구·경북 노동자생존권확보 투쟁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그해 3월 처음 독자적인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시기 대표적인 투쟁은 (주)아신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투쟁, 동협제작소 노조결성 투쟁, 한국경전기 부당해고 반대투쟁, 3공단을 중심으로 한 (주)성화, 삼부, 제일섬유 등의 해고반대투쟁, 동원급속 노조민주화투쟁 등이다. 1986년 4월 5일 신민당 개헌 현판식 집회에서는 시가지 일원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담은 독자적인 유인물이 배포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도 역시 강화되었다. 농민들은 1980년대에 들어 개방경제의 일환으로 개방농정이 추진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그 결과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는 농산물 가격보장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80년 경북 예천군에서 열린 '경북지역 농민대회'는 쌀생산비 보장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하였으며, 1982년의 '경북 상주군 함창대회'에서는 농업정책의 부당성을 비판하였고, 1983년 '경북 의성군 다인대회'에서는 농협민주화를 결의하고 농산물의 가격보장을 요구하였다. 1984년 경북 의성군 다인본당에서 열린 '추수감사제 및 경북 농민대회'는 1,100명이 넘는 농민들이 참석하여, 외국 농산물을 메고 시가행진을 행함으로써 농민들의 주장을 대내·외에 알리기도 했다.

1981년부터 농민운동의 주요과제로 나타났던 농업세제 시정활동은 농지세·수세 등 부당한 세제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세법 바로 알기 학습과 을류농지세 작물(고추, 마늘) 생산비 조사, 이의신청 운동 등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82년에 경북 의성군 상광분회에서 부당수세 거부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의성군 다인지역에서는 농지개량 조합비 현물 납부운동도 전개되었고, 영양군 청기분회 등에서는 을류농지세 문제와 관련하여 농지세의 필요경비 산출의 문제와 재해농가에게 감면혜택의 부여에 인색하였던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대의 농협민주화운동은 1970년대식의 사안별 시정운동에서 벗어나, 농민회원들이 이사·감사·총대 등을 맡아 농협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을 민주화하려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1982년에는 조합 민주화를 위한 집중지역을 설정하고 현장 활동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의성군 쌍호, 예천군 축동·구들방 분회, 상조분회에서 총대회에 진출했으며 감사와 이사 등의 임원을 맡기도 하였다. 조합장 선출에도 계획적으로 참여하여 총대회의 활성화와 농민회 활동에 대한 선전효과를 거두었다. 안동군 청기분회의 고추수매 부정 진상규명과 상광분회의 부당수세 거부 등 조합원의 권리회복을 위한 활동도 아울러 전개되었다. 특히 1980년대

전반기 농협민주화운동은 경북북부지역, 즉 풍천협의회, 의성읍, 안동군 청기분회, 점촌군 창리분회, 구천분회, 예천군 축동분회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에서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주요 활동 영역은 농민 생존권 투쟁으로 이행해간다. 사실 1980년대 이후 개방농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확대 정책은 농민들의 수입저지 투쟁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수입개방 등으로 저하된 농업소득을 커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써 1983년부터 추진된 복합영농 정책은 결국 거듭된 과채류의 가격파동과 1985년의 미국소 대량도입이 빚은 소파동 때문에 파산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1986년부터 소입식이 중단되었으며, 1987년부터는 돼지 입식뿐만 아니라 단지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도 복합영농 대상작목에서 제외시켰다.

1985년의 가장 두드러진 경북지역 농민운동은 경북 의성군 다인 협의회회의 소값 폭락에 따른 '소값피해 보상활동'이었다. 소사육 농가의 피해는 1984년 연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피해의 주원인은 외국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외국소의 과다 도입이었다. 소사육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였음을 깨달은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 문제는 의성군 <다인협의회> 산하의 풍양분회에서 이에 대한 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85년 하반기에 타지역 활동에 자극을 받아 <다인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의성군 신평면 쌍호 및 월소분회와 합동으로 소값 피해 보상과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 시위를 전개하였다. 비록 100여명의 회원농민이 9마리의 소와 11대의 경운기를 동원한 것에 불과하였지만, '소값피해 보상하라', '외국 농축산물 수입 중단하라' 등의 구호는 당시 경북북부지역 농민들의 강력한 자기선언이었던 셈이었다.

1986년에 이르러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저곡가 정책과 한미통상협상이 결과한 양담배 수입 때문에 담배생산 농가의 위협이 가중되었다. 이미 기록적인 농가부채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었던 지역농민들이 벌인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와 농가부채 해결, 농민생존권과 민주헌법 쟁취 등이었다. 안동군 풍천협의회에서는 구담 백사장에서 약 500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가부채 탕감 농민대회'가 개최되었고, 이어 1986년 4월 16일 안동문화회관에서는 약 700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 및 농가부채 탕감 농민대회'가 열렸다. 이때 농민들은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안동역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는데, 여기에는 특히 수녀들까지 최초로 시위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1986년 9월 1일에는 의성군 안계면과 안동군 풍천면, 영양읍 등에서 '미국농축산물 수입반대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도 150여명의 농민들이 경운기를 앞세우고 가두시위를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군부독재 퇴진', '민주헌법쟁취', '지방자치제 실현' 등의 구호는 참여한 농민들의 자신감 및 고양된 정치의식을 보여주었다.

이 외 1980년대 대구·경북지역 교육민주화운동으로는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대구지역회 활동이 있다.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약칭 Y교협) 대구지역회는 성명여중에 재직하던 이재원의 주도로 1981년 12월 17일 YMCA 회관에서 '대구YMCA중등교육자회' 발기인 모임을 가지고 창립되었다. Y교협에서 교육민주화운동을 시작한 교사들은 대부분 조직 활동과 독서

토론회 그리고 당국의 탄압을 받으면서 대자적 계급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대구 YMCA이사로 서울 YMCA와의 교류가 많았던 이재원은 계성재단과 협성재단의 젊은 후배 교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건설했고 전국 Y교협 회장도 역임하면서 한국교육운동의 핵심인물로 기록되었다. '기독교 정신과 교육자적 신념'에서 출발한 이 모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신교 신자 혹은 YMCA 회원이 아닌 교사들이 가입했다. 초기 활동 중 눈에 띄는 성과는 여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당시 사학재단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은 결혼과 함께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었다. 사립학교의 여교사들은 채용 당시 '백지사표'와 '결혼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적으로 쓰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불합리한 고용 조건에 맞선 Y교협의 투쟁은 승리를 하게 되었다.

1985년에는 경북 안동 Y교협이 출범한다. 안동지회는 대구지회의 지원을 받으며, 6월 29일 안동 YMCA 회관에서 창립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안동에서는 한 여고생의 불온서적 소지사건이 일어났다. 한국 기독교운동 총연맹 안동지구 회원이었던 이금난(길원여고 2년)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서적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을 문제삼아서, 지도교사 김대성(경적중 역사담당, 안동 Y교협)을 축심에 넘기고 해직된 사건이었으며, Y교협의 투쟁이 이어졌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민중교육지' 사건은 Y교협 대구지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전국회장이었던 이재원과 지역회원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86년으로 접어들어 개헌문제가 정국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면서, 5월 10일 '민주교육 실천선언(교육민주화선언)'이 발표되었다. Y교협의 존재는 일반 대중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Y교협 대구지회는 처음에는 단순히 YMCA의 산하 교사단체로서 친목과 학습동아리 차원의 소그룹 활동에서 시작했지만, 6년 동안의 탄압 속에서 오히려 조직이 탄탄해지고 커왔다. 이후 벌어진 본격적인 교육민주화운동의 핵심 인물들을 키운 기여를 했다.

3. 1987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에서 6월 항쟁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1987년 6월 10일 전국 18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대구, 안동, 포항 등지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면서 본격화된다. 이날 대구에서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대구·경북본부>주최로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시가지 곳곳에서 밤9시를 넘기도록 시가지 곳곳에서 전경과의 투석전이 계속되었고, 포항에서는 1,500여 명의 시민 학생들이 집회 개최지, 죽도시장이 봉쇄되자 약식 집회를 갖고 자정까지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했다. 안동은 2,000여명이 안동역과 조흥은행 앞 등 시가지에서 밤늦게까지 시위 후 자진해산하였다. 대구지역은 <6·10대회>이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일 가두시위가 지속되었고, 6월 20일에는 6개 대학 5,000여명이 연합집회를 갖고 달성파출소등 4개 파출소를 불태우거나 습격했다. 6월 26일 개최된 <평화대행진>은 6월 항쟁기간 중 가장 많은 인원인 4만여

명의 시민학생이 참여하여 6월 항쟁 중 가장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었다. 대구는 유신학원-반월당-명덕로타리-수도산(계명대학교)에 이르는 가로 전체가 시위인파로 넘쳐났다.

대구지역 6월 항쟁은 노동자, 농민, 학생을 비롯 다양한 시민계층이 주체가 되어 전개되었다. 지역 노동자들도 다양한 소모임별로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선전전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은 학생회조직과 대학별 투쟁위원회 조직을 중심으로 대중시위를 이끌었다. 항쟁은 학생들의 대규모 켈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시위가 거듭될수록 점차 노동자, 영세상인, 도시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되어 오랜 기간 보수적 정서가 지배했던 이 지역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시민항쟁이 전개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민족민주운동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계급, 계층별 조직의 확대로 나아간다. 이 시기 대구·경북지역도 6, 70년대 군사정권의 강권통치로 인해 파괴되었던 운동역량을 다시금 복구하고, 6월 항쟁의 성과위에서 청년학생들을 비롯, 노동자, 농민 등 대중조직들과 전선운동체를 점차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기존의 어용적 한국노총으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 관철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비로소 총자본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조직을 준비해갔다. 1990년 출범한 전노협은 1980년대 이래 산발적이고 국지적으로 진행되어온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기업별 노조체제아래 노동자 단결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전근대적 노동규율에 짓눌린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전노협으로 결집한 민주노조운동은 이후 업종(산업)별 연맹을 조직 골간으로 완전한 산업별 노조를 지향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5.11.11)으로 확대발전한다. 섬유와 금속 관련 중소기업체가 밀집한 대구지역은 1984년 택시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1986년에서 1988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3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파업,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역 노동운동의 역량은 전노협 산하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1989.11.8)을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이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1996.3.22)결성으로 확대발전해나갔다. 1980년대 노동운동이 학생출신 현장취업자들과 섬유와 금속 업종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데 비해 199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금속, 보건의료, 전교조, 건설, 민간서비스, 화학섬유 등 업종 전반을 망라한 산업별 연맹의 횡적 연대체로 발전했고, 이제는 민주노조운동의 토대위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제기하며 민주노동당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대구지역 민주노동당 정당명부투표 지지율은 11.6%, 경북지역은 12%를 각각 기록했다.

농민운동은 이른바 개방농정하의 무분별한 수입농산물에 의한 농가피해, 1990년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국내농업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거센 농민들의 반발을 배경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안동 가톨릭농민회가 주도했던 1985년 소값피해보상운동(일명 소몰이싸움)과 1988년 고추제값받기 대투쟁은 경북지역 농민운동과 운동조직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중요한 계기였다. 거듭된 투쟁을 통해 농민운동조직은 1980년대 소수의 의식화된 농민들이 종교

조직을 기반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인 자주적 농민운동조직으로 발전했다.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전국농민운동연합 등으로 나뉘어졌던 농민운동조직은 1990년 4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단일화되었다. 전농 경북도연맹은 군 단위 농민회조직을 토대로 UR 거부투쟁, 쌀수입개방 저지시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저지 운동 등 주요 사안에서 경북지역 농민투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년운동과 학생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을 비롯 시국의 주요 고비마다 정세를 열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학생운동조직은 6월 항쟁의 성과를 배경으로 1987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건설하고 1988년 조국통일투쟁, 1989년 임수경양 방북투쟁을 주도하며 1993년 한국대학생총연합으로 확대발전 되어갔다. 대구·경북지역 학생운동은 1987년 경북대, 대구교대, 영남대, 계명대, 효성여대 등이 참여한 대구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결성하고, 학원민주화, 사회민주화투쟁을 전개하며, 1990년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으로 조직전환을 했다. 대구지역 청년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로운 청년회와 대구KYC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85년 '민중교육지'사건,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 학술운동도 본격화되어 간다. 대구지역에서는 1985년 11월 대구·경북지역 교수들이 지역의 진보적 학술단체를 표방하며 <지방사회연구회>를 결성한다. 지방사회연구회는 현실비판적 세미나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결성을 주도하면서, 1992년 <대구사회연구소>창립으로 확대발전하게 된다. 대구사회연구소의 창립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특성을 보였던 진보적 지식인운동의 맥을 잇고, 보수적 정서를 가진 지역대중을 계몽하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대구사회연구소는 교육연구, 문화연구, 환경연구, 보건의료연구, 지방자치연구, 법제연구, 도시개발연구, 산업연구, 농업연구, 노동연구로 이루어진 각 연구분과 활동 뿐만 아니라 최근 지방분권운동과 지역혁신운동을 주창하며 국가균형발전 3대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서울중심의 지식, 교육체계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극복하고 지방의 진보적 지식인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민주화운동의 상징이다. 1985, 1986년 현장교사들의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대구·경북지역 교사들은 1987년 9월 26일 <대구·경북교사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해, 10월 31일 봉덕성당에서 <대구·경북교사협의회>를 창립한다. 88년 10월 30일, 경북대학교에서 <민주교육법 쟁취 결의대회 및 대구·경북교사협의회 창립1주년 기념집회>를 통해 1,000여명의 교사, 시민, 학생들이 모여 개최되었고, 1989년 5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경북발기인대회>가 경북대 야외공연장에서 마침내 성사되었다. 6월 8일에는 경북대 김민남 교수를 비롯 70여명의 교수들이 지지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에 직접 가입하기도 했다. 이후 전교조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해고자복지투쟁, 현장 분회활동, 교육현장에서 참교육실천활동, 사회민주화운동에 앞장서면서 1999년 마침내 정식 합법화를 쟁취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전선운동체는 이들 각 부문운동의 성장을 기반으로 발달하게 된다. 대

구지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연),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19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3년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이라는 전국적 전선체의 변화에 따라 1986년 민통연 대구·경북지부, 1989년 전민련 산하 대경민련, 1991년 이후 전국연합 산하 대경연합 조직으로 변화해왔다. 현재 지역의 전선운동체로는 대구·경북민중연대(2000.3), 대구·경북통일연대(2003.8.5),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대경연합, 1991.12.8) 등이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 경산민주단체협의회, 대구·경북청년단체연석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경북민중연대는 IMF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면서 노동자, 농민과 기층 민중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민중투쟁의 연대체로 출범했다. 현재 대경연합을 비롯,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전농도연맹, 민주노동당, 대경총련 등 지역 민중운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구·경북통일연대는 2001년 6.15선언 1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3년 본 조직을 결성하고 반전평화, 자주통일 사업, 민간 자주교류사업, 반통일악법 폐쇄활동을 하고 있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1996, 1997년 노동법개정투쟁과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추모시위,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주도하며 지역 사회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1990년대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운동을 대표하는 민중운동 뿐만 아니라 신사회운동을 표방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흐름이 등장하게 된다. 시민운동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여성, 환경, 인권, 복지, 장애인운동 등 1980년대 민중운동과 비교하여 운동주체와 조직, 쟁점제기 및 운동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며 급속하게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켜가고 있다.

먼저, 지역 여성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단계에서 전체 흐름에서 독자적 운동영역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여성단체들은 여성문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지역내 여성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 생활과제 발굴 및 지역여성조직 구축 등을 통해 독자적 자기영역을 구성하고 지역의 공적 영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운동조직들도 1988년 대구여성회 창립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대구여성의 전화, 함께 하는 주부모임,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 여성과현실연구회, 반미여성회, 대구여성해방연대 등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6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의 창립을 계기로 여성단체간 상호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문화예술운동은 1980년대 우리문화연구회, 극단 함께사는세상, 민중문화운동연합, 노동자예술문화운동연합 등 다양한 갈래로 활동이 이루어져 오다 1990년대 대구·경북민족미술인협회, 노래패 소리타래, 대구작가회의, 풍물굿패 마당, 대구독립영화인협회, 청소년문화모임 우리세상 등 장르별로 분화되어갔다. 현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1994.1.29)는 내부에 장르별 분과와 위원회, 특별위원회 체계를 두고 이들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포괄하고 있다.

지역 환경운동은 1991년 3월 발생한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을 계기로 자각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그해 9월 신천둔치에서 대구공해추방운동협의회 발족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3년 전국 환경운동연합 조직출범과 함께 대구환경운동연합으로 확대 발전되어 오늘에 이른다. 주요 활동으로는 환경교육활동, 환경문제 조사연구사업, 골프장건설반대운동, 폐기물 불법매립대책활동, 반환경적 현장대응 등이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단체는 다양한 분화되어 가는데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습지보존연대, 대구·경북환경연구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한국기독교환경대책 대구협의회 등이 활동 중이다.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저소득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의 복지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대학가와 회복지시설후원모임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전개되어오던 사회복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되었다. 1998년 창립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빈곤계층의 복지기본권 쟁취운동, 장애인 농촌활동, 대안가정운동, 사회복지정책연구, 시민단체연대활동 등 사회복지운동의 체계화, 지역화에 주력하고 있다. 1973년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 온 참길회는 사회복지시설후원, 노숙자지원활동 등 지역의 대표적인 자원봉사단체다.

1998년 창립한 대구참여연대는 지역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과거 민중운동의 대중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참여원칙에 입각하여 지역 시민사회의 포괄적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서명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지방의회 모니터활동, 지역경제 바로 세우기 운동, 아파트주민자치운동, 조례청원, 대구시에산안 감시활동이 있다. 대구 참여연대 외에도 대구지역에는 이미 오랜 기간동안 시민운동의 터전을 닦아 온 단체들이 있다. 대구YMCA와 흥사단 대구지부는 시민교육과 자원봉사, 사회적 후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990년대 초부터 시민과 전문가들이 결합하여 지역 시민운동의 씨앗을 키워 온 대표적인 종합적 시민단체들이다.

또한 우리사회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위해 교육사업과 일자리니눔, 상담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장애인운동단체는 현재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1999), 대구DPI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1990년대 초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제도가 실시된 후, 대구와 구미 등 지역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고용허가제실시, 인권문제가 심각히 제기되면서, 구민교회 김경태 목사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성서공단노동조합에서도 성서공단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글교육과 노동상담, 교육, 소모임조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사회운동의 합법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이 활성화 되었다. 권위주의적, 일방적, 획일적 관행들이 점차 사라지고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의 보편적 권리와 평등을 존중하는 쌍방향 토론문화와 협의적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은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사회의 변화를 목적의식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운동도 비합법적, 반공개적 활동이 합법적 공개적 활동으로 바뀌게 되고, 노동자, 농민 등 계급 헤게모니에서 중간층과 시민참여 중심으로, 폐쇄적 조직형태에서 개방적 자율적 조직형태로 운동주체와 조직, 활동방식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국가권력의 일방적 전횡이 기층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과거 권위주의적 낡은 체제의 그늘이 상존하고 있다. 여기에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서울중심의 중앙집중적 발전패러다임이 낳은 적폐와 그로 인해 지방민의 피해와 소외가 중첩되면서 이중, 삼중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은 1987년 이후 민중운동이라는 전통적 운동영역 외에 시민 사회운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1960, 1970년대 군사정권하에서 괴멸되다시피 했던 지역의 민주화역량이 1980, 1990년대의 엄혹한 정세를 뚫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지역민 또한 수십 년간의 군사정권 통치에 의해 형성된 지역감정과 보수적 정서가 일거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민주적 사회가치의 확산과 지역혁신을 위한 주체적 노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은 과거의 낡은 잔재를 청산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회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은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뿌리내리고 지역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IV.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1.

정치 · 학생 · 통일 · 시민 분야

1) 개요

한국 현대사회에 있어 민주화는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과제였다. 한국 현대사회는 미군정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이승만 독재 권력과 박정희 군사정권 그리고 신군부 정치권력이라는 독재 권력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로 인해 한국사회에서는 청산과 개혁되어야 할 과거사가 극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적 모순이 강화되었다. 그에 따라 개인의 인권과 권리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질곡과 모순을 타파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시기별로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2) 정치 · 학생 · 통일 · 시민운동 시기별 개괄

(1) 1950년대부터 4·19혁명시기

① 1950년대 이승만정권기

대구·경북지역의 이승만독재정권에 대한 민주화운동은 언론활동, 부정선거 반대, 2·4보안법반대 투쟁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언론활동은 이승만정권의 권력 기반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승만정권은 학원을 권력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학도호국단을 편성하고, 학생을 정치에 강제 동원해 왔다. 이에 매일신문 최석채 주필이 학생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매일신문의 시설이 파괴되고, 최석채는 구속되었다. 다음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대구의 개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승만정권의 경우 부정선거 사례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발견되어지는데, 이때에도 예외는 아니

었다. 그리하여 야당인 민주당의 성향이 강한 대구의 정치성향이 부정선거의 징후를 발견하게 되고, 개표를 중단하는 사태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장면의 정·부통령 당선 선언이 있는 뒤 개표 중단사태는 마감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정권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 정치적 폭거를 단행하여 권력의 장기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승만정권기 전반기부터 계속된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이 확대되자 야당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보안법 파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구지역의 경우 민주당경북도당의 주도로 2·4보안법 파동을 반대하는 가두시위가 펼쳐졌다. 특히, 1958년 12월 25일 민주당경북도당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파동에 항의하는 가두시위를 펼쳤다. 또 1959년 1월 14일 민주당경북도당은 재차 항의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입문석 도당위원장 등 10여 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② 4·19혁명시기

대구·경북지역 4·19혁명은 2·28운동으로 촉발되어 3·15부정선거 시위를 거쳐 폭발하여, 이승만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민주·민족운동을 전개를 가능케 하였다. 당시 대구·경북에서는 이승만독재정권의 붕괴과정과 그 이후 민주·민족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운동이 다방면에서 제기되었다.

4·19혁명은 한국 현대사회에 있어 민주·민족운동의 시발점이었다. 4·19혁명은 지배계급의 교체 없이 정권의 교체만 이루어졌다는 점과 친일과 숙청과 독재세력을 일소하지 못함으로써 미완성의 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운동' 혹은 '항쟁'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대구·경북지역의 4·19혁명은 민주화운동과 신생활운동, 통일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4·19민주운동시기 학생층은 자치학생회 건립운동, 어용교사 축출과 부패재단 정화운동, 교원노조 동조 및 지지 활동 등의 학원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치개혁 차원에서 4대 국회 해산 요구, 반민주세력 및 부패세력 척결운동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한미경제협정 반대와 이대약법 반대 운동 등의 자주 및 민주운동을 펼쳤고, 통일운동도 강렬하게 전개하였다. 이렇듯 4·19민주운동시기 학생층은 다양한 개혁을 역동적으로 주도해 나갔다.

가. 2·28학생운동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이승만 독재의 도구로부터 탈피시키고자 학원의 자유를 주창한 의거로서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었다.⁵⁾

이 운동은 2월 28일(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강연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우려한 자유당 경북도당과 공립 학교측에서 학생들에게 일요일 등교를 지시하면서부터 발단되었다. 각 공립학교의 2월 28일 일요일 등교 지시는 2월 25일 학생들에게 하달되었다. 경북고교에서는 3월 3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학기말 시험의 일부를 일요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대구고교에서는 토끼사냥이란 명목으로 일요일 등교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대구여중·대구여고·경상중학·대구

5) 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사』 1, 2, 3, 2000. 참조.

상고·경북여고·제일여중·대구공고 등에서 각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운동회·졸업식 연습·보충수업 등의 명목으로 일요일 등교를 지시하였다.

이에 그날 경북고교의 학생들은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준비관계로 곤란하다, 「무슨 이유로 변경하느냐, 「그날이 민주당강연회가 아니냐」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음날인 26일 경북고교에서는 학생위원회를 소집하여 '시험일자 변경의 부당성, 휴식의 자유 보장, 정치사안으로 피해를 볼 수 없음, 강연회 참석은 학생의 선택의 자유' 등의 이유를 들어 학교당국의 조치에 응할 수 없다고 결의하였다.

그 다음날인 27일 경북고교 학생위원장 자격의 이대우(李大雨)는 결의문 작성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방에서 대구고교 및 부속고교의 대표들과 함께 만나 시위 결행의 여부를 놓고 토의하였다. 그러나 결론은 내리지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28일 대구고교에서 먼저 교문을 나섰으며, 경북고교도 준비없이 결의문 초안을 1/3정도 낭독하고는 교문을 나섰다. 그 내용은 "일요일에 학생을 동원시키는 부당한 처사를 시정시키고 학원내의 학구적인 자유를 찾기 위한 우리의 뜻을 사회에 알리자"는 것이었다. 가두 시위를 벌이면서 학생들은 「학생 시위의 자유를 달라, 「학원의 정치적 이용을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북고교 외에도 대구고교, 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여고생들이 이날 시위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시위는 순수한 학생 시위였고, 각 학교별로 분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적인 구호는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 학생들의 시위는 학원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이승만 정권에 정면으로 공격을 가한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정치의 수단 혹은 도구가 아니라 사회의 한 주체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3·15부정선거 반대 시위를 거쳐 4·19혁명으로 계승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2·28 학생 의거'는 이승만 독재체제를 무너뜨린 4·19혁명의 서막이었다.

나. 4·19혁명

대구지역에서는 2·28에 이어 마산에서 3·15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있는 후 3월 16일 학생들이 학원자유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4월 19일 대학교수단도 시위를 전개하여 민주주의 확립을 요구하였다. 또한 4월 11일부터 야당인 민주당 경북도지부에서는 당사에서 규탄대회를 벌였고, 다음날인 12일에는 풍선데모를 벌였다. 학생들의 시위는 4월 19일부터 규모가 커지고 거의 매일 가두시위가 벌어졌다.

이승만정권 붕괴의 마지막 타격이었던 1960년 4월 25일, 서울에서의 대학교수단 시위에 이어 대구에서도 4월 26일 대학교수단 시위가 전개되었고, 대학생과 중등학생 그리고 시민의 시위가 잇따랐다. 이 시위에서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등은 시위대에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약속했다. 그리고 시위대는 독재정권의 기반이 되었던 경찰국장 관사, 대구경찰서, 덕산과 달성파출소, 공공건물, 자유당 경북도당, 부인회 본부, 연합신문 지사, 반공청년단 대구 갑구단 사옥, 신도환 반공청년단장 사택 등을 공격하였다.

다. 반민주·부패세력 척결운동

4·26시위 이후 개혁을 통해 한국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모색이 다각도로 제기되었으며, 그 가운데 반민주·부패세력의 척결운동이 전개되었다.⁶⁾ 우선, 당시 지역 언론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친일파 및 반공브로커부터 몰아내라”며 반민주세력을 축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후 5월말 이승만이 허정을 과도정부와 미국의 협조아래 미국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대구대(현 영남대) 학생 천여 명은 허정과도정부를 비난하는 시위를 전개하면서, [허정 수석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4월혁명을 더럽히지 말라], [이승만의 도주를 방조한 자를 즉시 공직에서 추방하라], [피로 찾은 국민주권 권력으로 밟지 말라] 등의 격렬한 구호를 외치면서, ① 국민을 기만하는 허정내각은 즉시 사퇴하라, ② 과도내각은 국민주권을 모독치 마라, ③ 이박사의 도주에 방조한자는 사퇴하라, ④ 매카나기대사를 본국으로 소환시키도록 하라 등 4개항의 결의사항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미국대통령에게 위 구호와 결의사항에 제시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메시지를 채택하였다.

6월 20일 경북대 학생들은 민주선거촉진학생연맹을 결성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인하면서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하였다. 학생층들의 공명선거 실시 운동이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고조되면서 [전국대학생민주수호추진위원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7·29총선거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대구지역 학생들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반혁명세력을 규탄하였다. 우선, 7월 16일에 12개 단과대학과 26개 고등학교 등 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역 광장에서 [반혁명인사규탄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 대회에서 학생들은 총선거에 과거 자유당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인사들이 입후보자로 나선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 대회 이후 7월 27일 수성천변에서 서울대 국민계몽대·경북대·대구대·청구대 등 4개 대학이 주최한 [반혁명세력규탄학생결기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학생들은 ① 부패 기성세력은 물러가라, ② 부정축재자 및 그 은폐자는 엄단하라, ③ 일체의 금력선거를 배격한다, ④ 거창·가창·산청 등지의 수많은 양민학살원흉과 백범선생을 위시한 민족지도자의 암살배후를 밝히고 엄단하라, ⑤ 4·19순국학도의 피를 모독하는 정치인 및 그 앞잡이 노릇하는 마산의 거부상자들의 혁명정신을 팔아먹는 자를 철저히 배격한다, ⑥ 우리는 일당독재를 막아야 한다 등의 결의사항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민주인사 규탄 운동에 힘입어 7·29총선에서 대구에서는 당선자 6명 가운데 5명이 민주당 후보, 1명이 사회대중당 후보였다. 반면, 구자유당 출신 입후보자는 모두 낙선하였다.

이러한 반민주인사 척결운동의 결과 1961년 1월 12일에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특검·특재조직법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라. 신생활운동

신생활운동은 서울대에 국민계몽대 신생활운동반이 결성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자립경제

6) 김일수, 「2·28운동의 4·19로의 계승」 『2·28민주운동사』, 2000. 참조.

확립, 외제 상품 및 향락 배격 등을 주요 활동 방침으로 설정했다. 이는 경제의 자립을 위해 국산품 사용을 강조하며, 건전한 일상생활문화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당시 경제난이 심각해 취업률이 많이 낮았던 한국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갔다.⁷⁾

대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계몽대, 신생활계몽대 등의 명칭을 가진 단체를 결성하여 신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양담배를 배격하자’, ‘정치혁명과 함께 생활을 개선하자’, ‘국산품을 애용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 선전활동을 벌였다. 또한 당시 크게 유행하던 빠, 카바레, 다방의 문을 닫게 하자거나 일본 가요를 일소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자 등의 향락문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잉여농산물로 인한 한국농민의 극심한 피해 양상을 지적하고, 미제 상품의 사용 억제를 주장하며, 휘발유 절약 등의 경제활동 방침을 설정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실제 대구에서는 신생활계몽대의 학생들이 거리에서 일본 음반을 수거해 불태우는가 하면 무허가 카바레를 급습해 사진을 찍어 전시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런 학생층의 활동은 기층세대의 일상생활에 일대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신생활운동은 지역의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당시 지역의 언론사들은 사설을 통해 생활계몽을 위한 학생들의 활동에 기대감을 표시하는 등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는 학생들의 신생활운동을 둘러싼 지지와 비판이라는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주요 이슈가 되었다. 주로 잡지 『사상계』를 통해 신생활운동의 요강과 실제 활동의 결과들이 소개되었고, 동시에 논쟁의 주요 주장들도 게재되었다.

이렇듯 학생층은 민주·민족운동이라는 거대한 구조의 변동을 일으켜 내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개선이라는 미세한 부분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한 학생들의 사회적 역할은 실천적이었던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마. 평화통일운동

이승만정권의 통일방안은 대내적으로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이었고, 대외적으로 UN감시 하 북한지역만의 선거를 통한 남한국회로의 통합이었다. 때문에 해방이후 민족사적 과제였던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이 이승만정권 아래서 제대로 논의될 수도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4·19혁명은 한국현대사에 있어 민족운동이 본격화하는 출발점이었다.

4·19혁명을 통해 민족통일에 대한 열의가 높아가고 있을 때 1960년 9월경 대구에서는 안경근, 장상호 등이 민주구국동지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경북시국대책위원회를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12일 경북시국대책위원회는 종로초등학교에서 평화통일에 관한 시국강연회를

7) 김일수, 「2·28운동의 4·19로의 계승」 『2·28민주운동사』, 2000. 참조.

개최하여, “남북통일은 싫어할 어떠한 이유도 배격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식 통한론의 주장과 같은 보람 있는 국제기운을 재빨리 받아들여 통일에의 자세를 굳게 하자. 통일을 겁내는 장내각의 소아병적인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며 중립노선도 자립노선이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행했다.⁸⁾

이 시국강연회 직후 경북시국대책위원회는 조직의 명칭을 민족통일경북도연맹으로 변경하고, “우리는 통일전이라도 우선 우리들의 기본인권에 관한 부모처자의 소식조차 모르는 일이 없도록 남북간의 자유와 삶을 경제적 교류와 정치적 목적외의 인사 왕래 및 문화교류는 급속히 실현되어야 하고 세계의 그 어떠한 힘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과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민족통일경북도연맹은 혁신세력의 통일적 연합체로서 조직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이하 ‘민자통’)에 참가하였다. 이에 발기 이후 재정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운영난에 부딪혔던 민자통이 정식으로 결성될 수 있었다. 민자통 결성대회(1961.2.25.)에서 ‘민족 자주 평화 민주적인 조국통일을 기한다’는 대원칙이 제시되었다.

민족통일경북도연맹은 1961년 3월 1일 달성공원에서 ‘3·1민족통일촉진궐기대회’를 개최하여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민족통일을 천명하였다. 이 대회에는 3만여 명이 운집할 정도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 대회에서 연사들은 “미소가 문화교류를 하는데 어찌 우리가 못한다 말이나. 남한의 면포와 북한의 비료 전기를 교역하고 통일을 위한 실정을 알기위하여 인사교류, 서신왕래, 기자교류를 하자. 1962년의 3·1절행사는 통일된 민족의 광장에서 하자. 일체의 외부 세력을 배격한다. 선건설후통일을 배격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행하였다. 대회 후 참가자들은 북성로-중앙통-반월당까지 ‘통일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민통련의 청년조직으로 경북민주민족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 경북민주민족청년동맹은 1961년 1월 영남일보 등에 민족통일에 관한 호소문을 싣는 동시에 2월 25일 대구역 광장에서 통일촉진운동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경북민통련은 대구에서 교원노조가 결성되자 경북교조지원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교원노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경북민족통일연맹에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개별적 차원에서 참여하였다. 교원노조운동은 4·19혁명 직후 대구시교원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의 구성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대구지구 및 경북지구 교원노동조합연합회가 각각 결성되었다. 교원노조는 단순한 교원의 생활개선운동 즉, 경제적 차원을 넘어 교조합법화투쟁, 노동조합법 개악 반대투쟁, 학원정화투쟁을 통해 ‘교권확립’,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경북지역 정치·사회단체와 함께 이대악법 연합공투위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한편, 혁신세력 가운데 민자통의 통일 방안에 반대하면서 영세중립화를 내세운 통일사회당은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을 결성하였다. 1961년 2월 26일 대구에서는 통일사회당경북도당준

8)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경상북도민족통일연맹사건』, 『한국혁명재판사 3』, 1962.

비위원회 주축로 시국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이같이 경북지역은 4·19혁명시기 통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었다.

바. 이대악법반대투쟁

경북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에 관한 열기가 높아지자 장면 내각은 반공특별법과 데모제한법 등 소위 ‘이대법안’을 제정하여 혁신세력 및 통일운동을 억압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혁신 및 사회단체 그리고 학생층은 이대법안을 이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대악법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년 3월 31일 경북지역에서도 각종 정당·사회단체 및 학생단체 대표가 모여 ‘이대악법반대경북정당사회단체노동단체학생단체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결성하였다.⁹⁾ 조직체로서 총무위원, 선전위원, 섭외위원, 동원부 등을 두었다. 여기에 교원노동조합연합회, 경북통일민주청년동맹, 경북학생이대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혁신당사회대중당통합추진위원회, 민족통일연맹, 민주자주통일협의회, 대구시노동조합연맹, 경북노동조합연합회, 사회당, 통일사회당 등 경북 각 정당사회단체 노동단체 및 학생단체가 참여하였다.

공투위는 1961년 4월 2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대구역광장에서 이대악법반대 대구궐기대회 및 촛불데모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당국은 대회를 불허하고 역광장에 경찰을 배치하여 대회와 데모를 사전에 방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공투위 관계자들은 「장정권 물러가라」, 「악질경찰관 물러가라」, 「이대악법은 살인법이다 죽음으로써 막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려 하였다. 그리고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4월 7일 수성천변에서 대대적인 이대악법반대 규탄대회를 개최되기도 하였다. 특히, 당국이 4·2규탄대당국이 4·2규탄대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함으로써 4·2데모사건이 발생하였고, 5·16쿠데타 이후 혁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4·2데모사건의 주동 인물은 김문심(교원노조경북연합회위원장), 최일(통민청경북위원장), 정만진(이대악법반대경북학생공투위위원장), 이동재(통사당조직위원), 박상홍(민민청경북통제위원장), 이승춘(통민청경북연맹조직부장), 이흥주(통일사회당조직위원), 하정기(민민청경북도맹원), 이정희(대구대), 홍영훈(민족통일연맹원), 성낙호(청구대), 신용선(가사) 등이었다.

사. 민간인학살진상규명 활동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960년 6월 15일에 6·25전쟁 중 한국정부에 의해 저질러졌던 ‘양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경북피학살자유족회가 결성되었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동성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령제와 학살 장소 확인 및 발굴 작업에 착수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1960년 7월 28일 유족회의 첫 공식행사로 대구역전 광장에서 유족 및 일반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를 개최하였다. 그 후 9월에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수창동, 지묘동, 송현동, 본리동 등 학살 현장을 답사하였다.

9)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대구데모사건』, 『한국혁명재판사 3』, 1962.

경북과학살자유족회는 유족회 활동을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60년 10월 20일 경북과학살자유족회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자리한 전자유당중앙당 부회의실에서 경남 및 각 시도유족회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유족회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 각 지역에도 유족회가 결성되었다. 동년 11월 경북 경주에서는 경주유족회를 결성하였으며, 월성국민학교에서 경주지구유족회 주최로 합동위령제를 개최하였다. 또 동년 5월말에 성주면 초전면을 중심으로 성주유족회가 결성되어 학살 장소 확인 및 위령제 개최, 시신 발굴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경산코발트광산 학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경산군유족회가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경북과학살자유족회는 장면정권의 반공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1961년 3월에 결성된 이대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에 가입하였으며, 3월 21일 경북유족회는 대구역 전에서 열린 이대특별법반대시위에 참석하고, 대구역을 출발하여 전법부장관 조재천의 집까지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와 같이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금기시 되었던 민족문제, 곧 평화통일운동이 역사의 전면에서 등장하였으며, 경북지역은 그 운동의 중심지이자 지지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통일운동은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좌절되었다.

(2) 박정희군사정권과 유신체제기 민주화운동

5·16군사쿠데타 이후 유신체제 성립 이전까지 대구·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은 몇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되었다. 군사쿠데타 이후 군부세력은 정권을 장악과정에서 소위 '혁명 재판'을 열고 대구·경북지역 민주민족운동을 압살하였으나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소멸시킬 수는 없었다. 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군정연장반대운동, 한일회담반대운동, 6·8부정선거 항의, 삼선개헌 반대투쟁 등 군부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이 지속되었다. 특히, 삼선개헌 반대투쟁은 보수정치인과 재야 운동세력이 연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컸다.

① 1960년대 민주운동

가. 군정연장반대운동

1963년 3월 16일에 군부정치세력이 군정연장 성명을 발표하자 민정당 경북도당에서는 3월 21일 당사에서 3·16성명철회관철경북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유극창, 권중호, 주병환, 임문석, 서동진, 조일환, 장영모, 이대우 등을 지도위원으로 선정하여, 군정연장을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다. 동년 3월 23일 경북투위는 대구역 광장에서 군정연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 경북투위의 지도위원을 포함한 40여 명은 군정연장반대라는 글귀가 써진 현수막을 앞세우고 북성로와 역전을 거쳐 나아갔다. 이때 [누구를 위한 군정연장이냐] [국민을 배신한 3·16성명을 즉시 철회하라] [군정연장정사반대] 라는 내용이 담긴 선전지를 돌렸다. 경북투위는 달성·고령지구, 경주·월성지구 그리고 대구의 4개 지구를 결성하여 지방조직을 확대하였고, 이 지방조직이 야권의 구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1963년 3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자유수호결기대회를 열고 군정연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이후 동년 5월 16일에 경북대학교 학생들도 군정연장 반대시위를 열었다.

나. 범국민적 굴욕외교 반대운동

1964년에 접어들어 스스로 민정이양을 거친 군사정부가 한일회담을 추진하였다. 한일회담은 6·25전쟁 중에 진행된 대일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체결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잇는 동북아시아역군사동맹을 갖추기 위한 의도를 품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일본의 자본시장을 넓히려는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회담에 임했다. 그러나 과거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한 사죄문제가 제기되면서, 회담은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였다. 장면정권이후 경제개발을 최우선과제로 삼은 군사정부는 한일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때 군사정부는 과거 식민지지배에 관한 문제를 회담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운동이 크게 발생하였던 것이다.

1964년 3월 25일에 대구지역의 계명대, 경북대, 대구대, 한사대 등 각 대학은 '한일회담 즉시 철회하라'며 2시간동안 시위 전개하였다. 이중 대구대는 천여 명의 학생이 강당에 모여 학생총회를 열어 ① 한일회담을 즉시 철회하라, ② 야당은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 ③ 감금된 학생을 즉시 석방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가두시위를 벌였다. 교문을 나선 학생들은 남문시장을 거쳐 대구역에서 집회를 가진 후 다시 도청 앞에 이르러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이때 초대생 2백여 명도 합세하여 가두시위를 벌였다. 다음날인 3월 26일에 계명대 학생들은 공화당, 민정당 대표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한일회담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시위는 1964년 6월초에 다시 벌어졌다. 6월 3일 서울에서 1만여 명이 학생들이 대규모로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벌이자 정부는 서울일원에 비상계엄령(6·3사태)을 선포하였다. 이에 대구에서도 다음날인 6월 4일 경북에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가두시위가 벌어졌고, 6월 5일에 계명대에서는 '서울의 학우들이 발이 묶여 행동하지 못할 때는 이곳 학생들이 그 바톤을 이어 받아야 한다'며 강당에서 긴급 학생총회 개최하고,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계속 벌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다. 한일협정비준반대투쟁

1965년에 접어들자마자 제7차 한일회담이 개막되었고, 2월에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었으며, 3월에 청구권문제가 합의되었다. 4월 3일 한일양국대표고섭이 일단락되어 청구권·교포법적지위·어업 등 3대현안합의요강이 가조인되었다. 이에 야권과 학생층에서 반대투쟁이 벌어졌다. 대구에서는 1965년 4월 2일 야당정치세력이 한일협정을 굴욕외교로 간주하여 극한 반대투쟁을 선언하였다.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등 지역대학가에서도 4월 21일부터 한일협정비준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가두시위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야권은 7월 10일에 대구종합운동장에서 한일협정 인준을 반대하는 '매국조약비준반대국민성토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8월 10일에 대구지역 대학교수들은 7월 재경교수들이 한일회담비준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을 지지하는 서명 활동

을 펼친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서명한 지역의 대학교수는 모두 4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 6·8부정선거 항의

1967년 6월 8일에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전국적으로 공개·대리투표·폭행 등 부정선거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130석 확보함으로써 개헌선을 넘어섰다. 이에 야당인 신민당은 6·8선거를 부정선거로 단정하고 투쟁을 선언하였다. 또한 학생층들도 6·8를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규탄대회를 벌여 나갔다. 대구의 6·8부정선거 규탄대회는 6월 14일 대구대생 2백여 명 [6·8 부정선거 무효]라는 현수막을 내세우고 시위를 전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계명대, 경북대생들도 6·8부정선거 규탄 및 성토대회를 개최하였다. 7월 3일 계명대에서 시내 6개 대학 4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연합 6·8부정선거 성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6·8부정선거 규탄 경북학생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② 1970년대 민주운동

1970년대 대구·경북지역 민주운동은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전개과정을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¹⁰⁾

가. 1960년대 말~1972년 10월유신 : 유신독재 구축에 대한 반대투쟁기

야권을 중심으로 박정희정권에 비민주적 권력장기화에 대한 반대활동이 벌어졌다. 곧 1971년 9월 현대에식장에서 지사체추진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10월에는 민주수호협의회경북지부 결성하였다. 이러한 야권의 활동은 유신체제 성립기 반유신운동의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1972년 1월말 육군보안사는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최영호 경북대 교수 포함한 대남간첩 7개망 2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하는 등 공안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시기 학생운동은 삼선개헌 반대투쟁과 교련반대투쟁을 전개하여 유신체제의 구축을 반대하였다. 먼저, 삼선개헌 반대투쟁에 대해 살펴본다. 1969년 1월 공화당이 삼선개헌 공식검토를 발표하면서, 삼선개헌이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대통령도 '꼭 필요하다면 개헌논의 연말에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6월부터 3선개헌반대운동이 야권과 대학가에서 시작되었다. 6월 27일 계명대생 3백여 명이 빌라도 광장에서 '민주헌정 수호하자'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3선개헌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경북대는 6월 30일부터 3선개헌 반대 데모를 시작하여 학기말 시험을 거부한 채 일주일간 전개하였다. 경북대학측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사회(正思會)를 비롯한 원리연구회, 현대사상연구회 등 3개 동아리의 승인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대구 대학가에서는 7월과 8월에도 계속 반대 시위가 벌어졌으며, 9월 개학과 동시에 더욱 격렬하게 시위를 전개하였다. 9월 1일 경북대생은 3선개헌을 반대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후 단식투쟁을 시작하였으며, 9월 5일 계명대생은 빌라도 광장에서 '마우(馬牛)대학생'

10) 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부, 「1970년대 대중운동의 성장과 자주적 대중조직의 대두」, 『한국현대사』 3-1960·7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풀빛, 1991, 참조.

이라 쓴 허수아비 화형식을 가진 후 3선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계명대는 호헌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3선개헌 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이면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대구지역 대학가의 3선개헌 반대운동은 신학기인 9월 내내 벌어졌다. 3선개헌 반대투쟁으로 구속된 계명대생 백현국, 임종호, 하정규, 최종성 등 4명은 1970년 4월말 대구지검에서 8개월 내지 10개월 구형받고, 8월 24일 전원 선고유예로 석방되었다.

다음 교련강화반대운동을 살펴본다. 1970년 11월 서울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자살이후 대학가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농성과 데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대학가의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교련강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대구에서는 1970년 12월부터 경북대를 시작으로 계명대, 영남대 등의 대학에서 1971년 연말까지 교련강화 및 교련전면 폐지투쟁이 전개되었다.

나. 10월유신~1975년 긴급조치 5호 : 유신 전반기의 반유신투쟁기

이 시기는 유신체제 전반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유신체제 철폐투쟁의 형성기라 할 수 있다. 1973년 10월 서울문리생의 첫 유신반대운동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은 다른 대학과 지방에 유신반대운동이 파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간에는 공권력의 학원사찰 반대와 학원자율, 언론자유 등이 주요 요구조건이었다. 1973년 10월말 경북대 법대생이 언론의 중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계기로 계명대, 영남대, 효성여대, 영남신학교 등 대구의 각 대학가에서 12월말까지 반유신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제기된 구호는 언론자유보장, 학원사찰 즉각 중지, 유신반대 등이었다.

학생층의 반유신운동은 1974년에 접어들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경북대의 경우 반독재민주구국투쟁위원회의 명의로 반독재 민주구국 선언문이 발표되었고, 각 대학에서도 구호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경북대와 계명대 등 지역 각 대학의 학생들이 다수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시기 대구·경북지역에는 4·19혁명기간에 축적되고, 군부정권에서도 보존되어온 민주·통일운동의 역량이 통일혁명당 재건, 민청학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탄압을 받게 되었다. 1973년 12월말 서울에서 재야인사 중심으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한 반유신운동이 전개되면서, 재야정치세력의 활동도 활성화되었다. 1974년에는 대구와 부산·광주지역의 민주인사들이 박정희정권 결사반대의 취지아래 경락연구회(經絡硏究會) 결성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3월 중앙정보부가 통혁당재건사건을 발표하였고, 4월에는 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재건위원회를 지목하였다.

인혁당사건은 4·19운동기 대구지역 민주·민족운동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에 주목을 끌뿐 아니라 이 사건의 조작 여부와 관련한 많은 논란으로 인해 현재까지 가장 주목받는 조직사건이다. 인혁당 관련자들은 대부분 민족자주통일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민족민주청년동맹과 통일민주청년동맹의 맹원과 혁신적인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다. 이 점은 인혁당 관계자들이 4·19운동시기 민족민주운동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인혁당 관계자의 상당수는 대구·경북지역 출신자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곧 인혁당 1, 2차 관계자 가운데 서도원, 도예중, 하재완, 송상진, 나경일, 강창익, 전재권,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임구호 등이

이 지역 출신이다. 특히, 이들은 민주민족청년동맹경북도연맹(이하 민민청경북연맹)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민민청경북연맹은 1961년 1월 7일 서도원, 도예종, 권달섭, 강왕수, 하재완, 송상진 등이 주도적으로 결성하였다.¹¹⁾ 민민청경북연맹의 서도원과 도예종은 민민청경북도맹준비위원회 명의로 1961년 1월 영남일보 등에 “국내외정세는 조국통일이 목전에 다달음을 시준(視準)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보수세력은 일부 외세에 아부 의존하여 조국통일을 지연시켜 보려는 기망상(欺罔相)을 노정시키고 있다”는 민족통일에 관한 호소문을 실었다. 또한 2월 25일 대구역 광장에서 개최한 통일축진운동대회에서는 연사 구대회 외 6명이 남북문화교류 등을 통한 평화통일론을 역설하였다. 3월 31일 서도원은 대구역전 광장에서 이대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가 주최한 이대법반대시위대회에 참석하여 “장정권은 자신의 부패와 무능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대법을 제정하려 한다. 한국에도 미국의 매카시선풍이 예상된다”는 요지의 개회사를 행했다. 강왕수와 서도원은 4월 7일 수성천변에서 진행된 이대약법공투위 주최의 이대법반대궐기대회에서 참가하여 강왕수는 “장정권은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부패를 은폐하려고 이대법을 제정하려 하므로 한사코 이를 반대한다”는 요지의 궐기사를 행했다. 그리고 강왕수는 4월 28일자 영남일보에 「학생과 조국통일」이라는 제목하에 자본주의 경제적 식민정책의 침략세력과 그러한 착취세력에 아부 굴종한 민족반동세력으로 인하여 통일이 지연되었다는 요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처럼 민민청경북연맹은 민족자주통일을 과제로 설정하여 민족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인혁당은 이러한 4·19혁명기의 민민청경북연맹의 운동론을 계승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혁당이 과연 당차원의 조직 수준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3일 전국대학생들의 조직인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23명을 지목하여 국가 변란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관련자들이 받은 형량은 징역 15년에서 사형에 이르는 굉장히 무거운 중형이었다.

- 사형 : 도예종(51, 삼화토건 회장), 서도원(52, 무직, 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이수병(37, 삼락 일어학원 강사), 하재완(43, 양조장 경영), 김용원(39, 경기여고 교사), 우홍선(45, 한국골드스탬프사 상무), 송상진(56, 양봉업), 여정남(31, 무직, 전경북대학교 학생회장) 이상 8명
- 무기 : 전창일(55, 극동건설 외공부장), 김한덕(43, 블록제조업), 나경일(44, 노동), 강창덕(46, 무기), 이태환(49, 측량설계사), 유진곤(37, 대한목재사장), 이성재(50, 무직)
- 징역 20년 : 김종대(38, 삼락일어학원 원장), 조만호(40, 학교도서 보급), 정만진(35, 목욕업), 이재형(36, 가전사 경영)
- 징역 15년 : 전재권(47, 상업), 황현승(39, 팽신상고 교사), 이창복(36, 무직), 임구호(26, 고려학원 강사)

11)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경상북도민주민족청년동맹사건」, 『한국혁명재판사』 3권, 1129~1148쪽.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의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과 고문을 당했으며, 정당한 변론을 가지지 못한 채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된 지 20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측면에서 유신체제 아래에서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기도 하다.

이를 계기로 대구지역 대학가에선 반유신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이 계속 발표되었고, 이에 당국은 선언문 발표에 관련된 학생을 구속수감하는 탄압을 강화하였다.

다. 1975년 긴급조치 5호~1979년 10·26사태

이 시기는 정권 퇴진, 유신 철폐투쟁의 고양기라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대구지역 대학내에 예목회(경북대)·여명회(경북대), 전통문화연구회(계명대), 전통문화연구회(영남대) 등의 이념동아리가 등장하고, 기독교의 도시산업 선교활동과 가톨릭의 JOC 활동 그리고 대학생 불교 모임인 대각회를 중심으로 종교 및 인권운동이 펼쳐지면서 학원·종교·노동(또는 농촌)이 운동 차원에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유신철폐, 군부정권 퇴진 등의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학가의 유신반대운동은 긴급조치 해제, 학원자유 보장 등을 구호로 벌여졌으며, 경북대에서는 1978년 11월 두 차례에 걸친 민주구국선언문 발표와 시위가 일어났다. 1979년 5월 계명대 축제 때 연극반의 연극사태와 영남대 축제 때 탈춤사건이 각각 발생하였다.¹²⁾ 각 대학별로 반유신운동을 전개해오던 대구지역 각 대학은 1979년 9월에 이르러 3개 대학 반유신운동 연합시위를 개최하고, [사회정의구현을 위한 경북학생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에 대한 학생층의 반유신운동의 집중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은 임시휴교 조치를 취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10월에도 반유신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3) 5·18민중항쟁과 1980년대 민주운동

① 1979년 10·26사태 이후 1980년 5월까지 '80년의 봄'의 기간

10·26사태 이후 대구지역 각 대학은 '80년의 봄'을 기대하면서 유신체제 아래 강화되었던 학도호국단을 철폐하고 자율적 학생회를 구성하는 학원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1980년 2월 계명대는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여 학원민주화실천위원회를 결성하여 총학생회조직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대구지역 최초로 대자보 건설 투쟁을 전개하였다. 4월 경북대는 4·19 제20주년 기념제를 개최하여 제2의 4·19선언문을 채택하여, 학원민주화운동을 추진하였다. 4월 영남대도 학원민주화를 위한 공청회와 집회를 거의 매일 열었다. 또한 계명대의 병영집체훈

12) 대구 계명대 축제 사건은 축제 때인 1975년 5월 10일에 기독교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연극반원들이 이근삼 작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를 공연하고 있던 중에 공연 내용이 사전 검열된 것과 다르다하여 출연자들이 현장에서 끌려나오고 기독교학생회 회장 권오원이 학교 직원에게 구타당한 사건을 말한다. 2주일 후 학교당국은 이를 문제 삼아 권오원, 이상윤, 박민서, 김종성, 서순주 등 5명에 정학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여 '처벌취소'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나 학교직원들에 의해 유산되었다. 영남대 탈춤 공연 사건은 1979년 5월 15일에 학생들이 학교 축제 행사 중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한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8명이 연행되어 2명이 구속되고, 또 8명 모두 학교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련반대 유인물 배포사건, 경북대의 구속학생석방위원회 결성 등이 벌어졌다. 5월 계명대가 대구지역에서 1980년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박헌채 강연후 '계엄철폐', '유신잔당 척결'외치며 가두시위 전개하였고, 축제기간을 민주화투쟁기간으로 선포하며 전두환퇴진, 언론자유보장, 노동삼권보장을 요구하였다.

5월 경북대도 복교생을 중심으로 민주화투쟁협의회를 구성하여 총학생회와 연합으로 비상계엄해제, 노동 3권 보장 등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5월 14일에는 대구지역의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한사대 등의 대학이 비상계엄해제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량이 파괴되는 등 시위가 매우 격렬하였다. 5월 16일에는 전국 55개 대학 학생대표가 모여 제1회 전국대학총학생회회장단 회의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현시국과 학생운동 방향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여기에 대구의 경북대, 계명대 등이 참가하였다.

이처럼 '80년의 봄'에 대구의 대학가는 학원자율에서 민주화투쟁운동까지 매우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곧, 학원자율화, 학도호국단철폐, 어용교수 퇴진, 사학의 족벌체제 퇴진, 계엄철폐, 병영집체훈련, 민주화촉진 등의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② 1980년대 전반기 민주운동

1980년대 전반기는 5·18민중항쟁 이후부터 19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민주운동을 크게 학생운동과 재야정치세력의 운동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학생운동

1970년 후반 실천투쟁적 관점과 이론학습적 관점 등 두 흐름으로 진행되어오던 대구지역 학생운동은 5·18항쟁을 거쳐 지도부가 강제 징집되면서 침잠, 조직재건을 반복하였다. 광주항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군부에 대한 학생층의 의식화 방식이 크게 변화되었다. 5·18민중항쟁을 거치면서 조정기를 맞게 된 지역의 대학가는 1981년 신학기부터 전두환정권을 반대하는 반정부유인물 살포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에 1983년에는 학생과 노동자를 연결하여 외형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생층 내부의 의지를 통일시키기 위한 정치경제학 학습을 진행시켰다. 그 가운데 외형적으로는 역량 강화를 꾀했고, 내부적으로는 의지의 통일화를 다졌으며,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미국과 제3세계를 바라보는 비판적 관점이 형성되었다.

1983년 유화국면이 시작되자 민주화운동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 12월 제적학생복교조치 및 해직교수복직을 허용하는 '학원자율화'조치가 취해지고 학내에 투입된 경찰이 철수하자 학생이 활성화되었다. 1984년부터 사면된 학생운동 지도부들이 속속 학교로 돌아오면서 학생운동 조직이 재건되었고, 학원민주화 및 학원자율화 쟁취를 내세우며 지도휴학 및 강제징집의 철폐, 졸업정원제와 상대평가제의 폐지, 학내 언론의 활성화, 학자추 인정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4년 5월 영남대의 경우 영대자율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가 영대민주화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청회 개최, 4·19추모집회, 춤과 노래 보급, 화형식,

광주학살사건 사진 폭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생회 건설을 바탕으로 1984년 5월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 등 3개 대학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전두환매국방일반대로 규정하여 연합시위 전개하였다. 그리고 11월 없어진 학생의 날에 즈음하여 지역의 각 대학은 학생의 날 부활 연합기념식을 열고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11월 13일 각 대학생은 영남대 사회대 광장에서 학도호국단 해체식을 갖고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26일에는 계명대 빌라도 광장에서 시국성토회를 개최하였다.

1985년 4월 10일 경북대에서 경북·영남·계명·대구대생 3백여 명이 4개 대학연합학원민주화쟁취대회 개최하였고, 일주일 뒤인 4월 17일 고려대에서 열린 전국학생총연합결성식 및 강제징집희생자추모비 제막식을 가진 후 대구지역 학생들의 총학생회 부활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그리하여 5월 대구지역 대학생들이 민정당 대구 제2지구당 사무실과 제3지구당 사무실에 최루탄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6월 들어 [대구민주투쟁학우일동] 명의로 '언론의 각성 촉구투쟁을 전개하며'라는 유인물을 돌리며, KBS방송국에 화염병과 최루탄을 투척하였다. 1985년 10월부터 대구지역 대학가에는 학원탄압저지투쟁위원회(경북대)가 결성되었다.

1986년에 접어들어 경북대 학생들이 민주개헌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는가 하면,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4월에는 대구 아세아극장에서는 직선제 개헌추진대회가 개최되는 등 민주개헌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 학생운동은 기존의 운동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운동의 과학적 체계화를 본격화하였으며, 사회변혁운동의 사상으로 '자주·민주·통일'이념의 확립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대중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¹³⁾

나. 제도권 정당의 민주운동

이 시기 제도권 정당의 반유신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은 1986년 4월 5일 대구 아세아극장에서 강행된 신민당과 민주협외의 개헌현판식을 들 수 있다. 신민당은 198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국회내 개헌특위를 설치하는데 실패하면서부터 원외투쟁의 수단을 채택하였다. 신민당의 원외투쟁 방식은 1천만 명 개헌서명운동과 개헌현판식 집회였다.

개헌현판식 집회는 3월 11일 서울지부결성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3월 23일 부산대회, 3월 30일 광주대회, 4월 5일 대구대회, 4월 19일 대전회의, 4월 26일 청주대회, 5월 3일 인천대회, 5월 10일 마산대회, 5월 31일 전주대회 등이 차례로 개최되었다. 특히, 대구대회는 민통련경북지부가 '4·5대구민중투쟁'이라 부를 만큼 대학생 및 재야세력의 참여가 많았다.

당국은 개헌현판식을 방해하기 위해 4월 5일 오후 3시에 축구국가대표 평가전을 개최하고, 초중고 학생과 공무원은 식목행사에 동원하였으며, 예비군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다. 또 식당인 아세아극장 옥상출입구를 시멘트로 봉쇄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이 집회와 관련해 141명을 연행하고 16명을 구속하였다.

13)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부, 『광주민중항쟁과 1980년대 전반기 사회운동』, 『한국현대사』4-1980년대 한국사회와 민족민주운동, 120-123쪽.

이 현판식은 1985년 2·12총선(신민당이 100석 이상 차지)의 열기를 한 단계 끌어올려 전두환정권에 대한 대중적 저항운동으로 발전시킨 의미가 있었다.

다. 재야 정치세력의 민주운동

1983년에 조성된 유화국면을 통해 민족민주운동은 9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출범시키면서 운동공간을 급속도로 넓혀 나갔다. 또한 1984년 11월 전남민주청년운동협의회와 인천지역사회운동 등 지역운동단체들이 결성되었다.

1984년에 접어들어 운동세력의 조직적 연대를 모색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연대조직의 결성을 둘러싼 견해차로 1984년 6월 민중민주협의회(이하 민민협)와 1984년 10월 민주통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각각 결성되었다. 그러나 양대 조직의 출현은 지역운동내의 혼선을 초래해 1984년 말부터 연합운동을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두 단체는 국민회의안을 기본으로 하여 통합조직의 형태로 결정되어 1985년 3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을 결성하였다.

1980년대 전반기 전선통일의 귀결점인 민통련은 1989년 1월 전민련이 결성되면서 해소되기까지 약 3년여에 걸쳐 구로동맹파업 지지투쟁, 민주헌법쟁취투쟁, 고문살인은폐조작 규탄투쟁 및 국민운동본부 결성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⁴⁾ 특히, 민통련은 민주헌법쟁취투쟁으로서 개헌운동을 전개하였다. 민통련은 3월 5일 소속 28개 단체의 303명의 인사의 개헌요구서명을 발표하면서, 개헌서명운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신민당의 개헌현판식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20~30만 명의 군중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광주집회 이후부터는 신민당과 별도로 시민대회를 준비하고 추진해 나갔다.¹⁵⁾ 이에 민통련경북지부는 1986년 4월 5일 아세아극장에서 열릴 개헌현판식을 '4·5대구민중투쟁'이라 규정하고 대회에 착수하였다.

민통련은 4월 5일 대구 현판식대회에 대해 "신민당 개헌추진 각도지부 현판식의 과정에서 대중의 군사독재에 대한 불만은 부산대회에서의 열기를 광주대회가 이어 받아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의 불꽃을 계기로 전국민에 확산되었다. 뒤이어 개최된 대구대회는 한층 고양된 열기와 대중들의 호응으로 군사독재 퇴진과 개헌에의 요구를 민중투쟁의 양상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분절점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민통련경북지부와 대학생들은 아세아극장 벽에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구호를 적은 현수막을 붙였다. 또한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을 물러가라,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광주학살 지원한 미국은 사죄하라', '독재타도 파쇼타도'라는 구호와 함께 아리랑, 애국가, 선구자, 선봉에 서서, 오월의 노래, 투사의 노래, 좋다 송(頌), 우리의 소원을 통일, 흔들리지 않게, 아침아슬, 농민가 등을 불렀다. 그리고 청·장년과 대학생 5백여 명이 스크럼을 짜고,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현수막을 앞세운 채 대구은행-만경관-중부서-시민회관-대구역-중앙로를 돌며 시위를 벌였다.

14) 앞의 책, 129~132쪽.

1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편, 『개헌과 민주화운동』, 민중사, 1985, 70~71쪽.

이날 배포된 유인물은 민통련 경북지부의 「대구의 소리」, 국민총궐기 홍보 전단, 민통련의 서명운동 참여 소책자, 민중의 소리,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원칙, 대구지역학생연합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대구민주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민주협외의 「민주통신 14호」, 민주산악회 회보, 신민당의 「신민주전선」, 김대중 비서실의 「우리소식」 등이 있었다.

이날 대회로 인해 구속된 인사는 김충환, 유정수, 양혜단, 김성오, 신기복, 박동주, 박문수, 최희중, 민병중, 황권연, 이정림, 하재권, 조종주, 임채도, 이모 등이었다. 그리고 민통련경북지부의 이강철, 권오국 등도 구속되었다.

이때 대구·경북에서는 민통련을 비롯,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대구교구연합회, 경북기독교농민회, 대구기독교청년연합회, 우리문화연구회, 경북노동자생존권투쟁위원회 등의 지역운동단체가 속속 결성되었다.

이후 민통련은 전체 민주운동세력과 함께 「고문 및 용공조작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고문공대위), 「미·일 경제침략저지 범국민운동연합」, 「학원안정법 반대 전국투쟁위원회」등을 결성하여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범국민운동기구는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일회적으로 끝나버리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¹⁶⁾ 한편, 1987년 재야에서 민주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가 결성되어 민주개헌과 민족통일운동에 참여하였다.

③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의 실천은 '합법적인' 운동조직의 형성과 운동영역의 다원화로 특징 지을 수 있으며, 이것이 6월 항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6월 항쟁은 노동, 농민, 청년,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운동조직이 형성되는데 기여했으며, 이들 조직은 1989년 전국민중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이라는 전국적인 연대조직의 기반이 되었다. 이후 각 운동 분야별로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창립되었고, 1991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도시민협의회(전민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이 줄지어 조직되었으며, 이러한 조직들이 힘을 모아 1991년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특히 전대협의 결성은 과거 '지하'에서 서클단위로 활동하던 학생회가 전국적인 학생회조직을 건설함에 따라 민주화운동에서 학생운동의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적 민주화에 이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의 방북은 기존운동세력간의 노선에 대한 논쟁에 불을 댕겼으며, 민주화운동의 다원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열망 속에서 군부독재권력에 맞섰던 '민주열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열사들의 민주화정신 계승에 대한 논의도 더불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민주화운동의 변화는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6월 항쟁 이후 전민련과 각 부문 운동의 대구·경북지역 산하조직이 연이

16) 『전환』-6월투쟁과 민주화의 진로-, 사계절, 1987, 327~330쪽, 이재화, 「민통련·국본의 위상 및 활동 평가」, 『한국사회통일전선논쟁』, 죽산, 1990, 368~373쪽.

어 조직되었다. 이들 조직들은 1991년에 대거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이하 대경연합)으로 통합되어, 6월 항쟁이후 잔존해 있던 반민주, 독재세력에 대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은 전민련과 대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외에 각 대학별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졸업생들이 모여서 건설한 민주동문회의 역량이 크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되어 희생된 동문을 다수 배출한 경북대와 영남대의 민주동문회는 4·9통일열사 추모제를 1989년부터 거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민주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9년부터는 민주동문회와 지역의 운동조직들이 연합한 4·9통일열사추모제준비위를 조직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의 특징을 반영하여 1987년 이후 주요한 민주화운동 사례 3가지를 선정하였다. 그 첫째는 1987년 이후의 민주화운동 지형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6월 항쟁”을 살펴보았으며, 둘째는 군부독재정권의 잔재청산과 학원민주화라는 열망속에서 나타난 “영남대 박근혜재단퇴진운동과 총장직선제” 투쟁을, 셋째는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현재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4·9통일열사투쟁”을 살펴보았다.

가. 1987년 6월 항쟁¹⁷⁾

대구에서 6월항쟁의 시작은 6월 10일 대회장이었던 대구중앙공원 주변을 비롯 시내 중심가가 철저히 봉쇄된 가운데서도 오후 5시 30분경 민주당, 민주산악회 회원 등 1백여 명이 중구문화동 국세청 앞에 모여 중앙공원 쪽으로 행진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0여분 뒤에 학생과 시민 1천여 명이 한일극장 건너편이 모이기 시작해서 시내 30여 군데에서 총 2만여 명이 “동장에서 대통령까지 내손으로” 등 10여종의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유인물 3종 1만여 장을 뿌리면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대는 동성로, 대구역, 대구시경 앞 네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날이 어두워지면서 변두리 지역인 신암, 신천, 내당, 대명동 등 지역으로 이동하여 경찰 수송차 및 파출소를 습격하기도 했다.

6월 15일에는 경북대와 영남대 학생들이 학기말고사를 거부하고 교내시위를 벌인 뒤 오후 6시 40분 경북대생 3백여 명이 대구백화점에서 가두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시내 곳곳에서 밤늦게까지 영남대생, 계명대생, 그리고 시민들이 가세한 가운데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그 다음날에는 대구지역 4개대 연합시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사전 봉쇄로 무산되고 오후 6시 20분부터 동성로와 중앙로 등지에서 산발적인 가두시위가 5시간동안 계속되었다. 이날 시위에는 대학생 2,500여명이 참가하여 시위 인원으로는 그날까지 가장 큰 규모로 시위집회에 동원된 경찰병력은 2,200여명이나 되었다. 가두시위에 앞서 영남대생 2천여 명은 오후 1시 20분경 교내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가두진출을 기도하였고 오후 2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교문에서 경찰의 최루탄 발사에 맞서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경북대생 1,500여명도 오후 4시경

17) 본 내용은 한국기독교사회연구원, 『기사연 리포트 2 - 6월 민주화대투쟁』, 서울: 민중사, 1987, 155~169쪽에서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일청담 로터리에서 1시간가량 출정식을 가졌고, 계명대생 150여명도 같은 시각에 노천강당 옆에서 출정식을 갖고 개별적으로 시내에 진출했다.

3일째 야간시위이자 대구지역 5개대 연합시위 3일째인 17일에는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대구시내 중심가를 비롯 20여 군데서 5시간동안 시위를 했다.

연합시위 나흘째인 6월 18일에는 중앙공원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살인 최루탄 범시민 민주화대행진’이 경찰에 의해 사전 봉쇄되자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효성여대, 대구한의대 등 대구지역 6개대 학생과 시민 등 1만여 명은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7시간동안 대구 중앙로, 반월당, 남문시장 등 도심 10여 곳에서 최근 들어 최대규모의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2천여발의 최루탄을 시위대와 시민을 향해 마구 발사해 심한 항의를 받았으며 시위대도 거센 투석과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종전과는 달리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이날 시위에는 젊은이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 중년층 시민도 많이 가세했다.

비가 내린 19일에도 대구지역 6개대 학생과 시민 5천여 명은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7시간동안 중앙로, 한일로, 대서로 등 대구시내 간선도로를 누비며 5일째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날 시위는 오후 5시부터 3시간여 동안 학생들이 제의한 무석(無石) 평화시위를 경찰들이 받아들여 최루탄을 쏘지 않는 무탄(無彈)으로 시위대가 앞서고 경찰이 뒤따르는 평화시위를 연출하기도 했으나 날이 어두워지면서 최루탄과 돌이 등장 다시 격렬해졌다.

가두시위 6일째인 20일에는 계명대와 영남대생 3천여 명이 오후 3시 30분경 서문시장 진출하였다. 이 날은 가두시위 가운데 가장 긴 10시간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여졌다. 이날 시위에는 일부군중이 각목을 들고 나왔다.

일요일이었던 21일에는 대구지역 5개대 대학생 1,500여명은 경북대 운동장에서 2시간가량 ‘2보전진을 위한 애국학생, 시민연합 대동제’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이날 최근 정국과 시위 상황을 분석하고 대동놀이에 이어 ‘군부독재 및 미제 화형식’을 가졌다.

7일째 연합가두시위인 22일에는 대구지역 4개대생 2,500여명이 오후 5시부터 도시외곽지 시장부근에서 시위를 시작하여 자정까지 7시간 동안 계속하였다. 시위대는 해가 지면서 시내 중심가를 돌며 연좌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은 50%정도 병력을 증원하여 전격적으로 체포조를 동원하여 마구잡이로 학생, 시민 110명을 연행하였다.

연합시위 8일째인 6월 23일에는 대구지역 4개대생 2천여 명이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시내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경찰은 학생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고 1천여발의 최루탄을 마구 쏘는 등 ‘강경’진압을 하여,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샀으며 학생들도 화염병과 쇠파이프, 돌을 드는 등 강경 대응했으며, 이천 1동등 2개의 파출소가 불타거나 부서졌다. 시위도중 대구대 생물교육과 1학년 김윤세군(23)이 왼쪽눈에 직격탄을 맞아 수술을 받았고, 대구공고생 박모군(19)도 경찰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학생, 시민 3백여 명과 경찰관 7명이 부상당했다.

24일에는 대구 4개대생이 가두시위 없이 교내집회만을 가졌다. 경북대는 오후 4시부터 9백여 명의 학생들이 대강당에서 ‘6·26 대행진 참가 및 최루탄 정권 응징대회’를 열고, 오후 5시 30분쯤

부터 6·26 대행진 참가 유인물을 시내에 살포하였다. 계명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단대별로, 4시부터는 노천강당에서 '군부독재종식 및 호헌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갖고 6시쯤 해산하였다. 영남대와 대구대도 교내 토론회를 벌인 후 해산하였다.

6월 26일에는 대행진 시발 예정 장소인 중앙공원이 경찰에 의해 완전 봉쇄되자 4만여 명(국민운동본부추계)의 시민이 유신학원 네거리-명덕로타리-수도산 사이의 간선도로 등에서 27일 새벽 01:30분까지 가장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반월당, 유신학원, 대구시경, 동아쇼핑, 명덕로타리 등 13군데에서 최루탄에 맞서 투석전을 벌였고 4곳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로 학생, 시민 등 40명과 경찰관 28명 등 6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대봉 2동 파출소 내부가 전소되는 등 파출소 5개소와 민정당 대구3지구당 사무실이 피습되어, 집기 등이 부서지거나 불탔다. 이날 시위대중 일부는 꽃과 각목을 함께 들고 나와 "최루탄을 쏘지 않으면 꽃을, 발사하면 각목을 선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시내 곳곳에 대자보자 나붙었다.

그 다음날인 27일에는 대구지역 5개대생 7백여 명이 경북대 대강당에서 3시간 동안 애국학생 6·26 연합보고대회 개최 후 향후의 행동방향을 토의하고 가두시위를 계속할 것을 결의하였다.

포항에서는 6월항쟁기간 동안 민주산악회 포항시 지부, 포항민주화협의회, 기독교청년협의회 회원, 시민, 학생, 성직자등이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병구(포항민주화연합회장)와 김영천(포항기청협의회장)이 연행되었다.

안동에서는 경북북부지역 공동대책위 주최로 시위가 벌어졌으며, 2천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시청앞, 안동역, 버스터미널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6월 26일에는 시위대가 약 2만 명으로 증가하여 시외버스터미널과 역전앞 광장과 도로를 점거하고 평화행진을 하였다. 이 때 시청앞 광장을 '민주광장'이라 명명하였다.

경주에서는 동국대생을 중심으로 기독교병원 앞 청기와 네거리, 팔우정 로타리, 성건파출소 앞, 대왕극장 앞, 화신약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김천에서는 26일에 김천 정생회와 김천, 금릉, 상주, 선산지구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그리고 통민당 당원이 "민주쟁취"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영천에서는 26일에 구시청앞 광장에서 민주당 당원 등 20여명이 태극기를 들고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완산동 신시장 앞까지 5백 미터를 가두시위한 후 만세를 부르고 자진 해산하였다.

의성에서도 26일 경중노회 회관에서 의성, 군위, 청송 등지의 120개 교회에서 온 신자 5백여 명이 "자유민주주의적 정치문화 발전과 직선제 개헌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나. 영남대 박근혜 재단퇴진운동과 총장직선제 투쟁¹⁸⁾

이 투쟁은 1988년 10월 18일 영남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영남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정감사는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5공화국 20년 만에 부활한

18) 본 내용은 영대문화발전위원회, 『영대문화 36집』(겨울호, 1996)에서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것으로 영남대에 거의 최초로 국정감사권이 발동되었다. 이는 박근혜 재단과 관련된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감사에서 영남학원의 정통성문제, 박근혜씨의 재단관여문제, 교수들이 영남투자금융에 투자한 복지기금문제, 부정입학문제 등 영남대학교의 비민주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한편 학생 측은 재단이사진의 전면퇴진을 요구하였지만 재단 이사진의 퇴진에 별다른 기미가 보이지 않자 1986년도의 졸업정원제 폐지와 민주화대행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대행진이 교수, 학생의 참여로 벌어진다. 그리고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그리고 총학생회로 구성된 '영남학원 민주화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1월 8일에 재단이사진 퇴진을 요구하며 대명동 캠퍼스까지 민주화대행진을 벌였다.

사실 영남대학교는 청구대학교와 대구대학교의 합병으로 이루어졌다. 합병의 과정에서 박정희는 권력을 행사하여 학교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어떤 서류에도 박정희가 학교주인이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재단에 관여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의 딸인 박근혜씨가 재단의 이사로 되어있었다. 이것이 학생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박근혜를 비롯해 비리에 연루된 재단이사진이 사퇴 하게 되었다. 구재단은 재단의 비정통성, 재단과 학교 당국간의 유착과 간섭, 파행적인 학교운영과 '비리 등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낱알이 드러나 더 이상 발붙일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영남대가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파행적인 학교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직원, 교수들 모두가 학교의 비민주성을 바로 잡으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1988년 12월 영남대에서 최초로 직선총장선거를 실시되었고, 김기동 총장이 제 1대 직선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사건이 마무리 지어졌다.

다. 4·9통일열사 투쟁

인혁당사건에 대한 재평가 및 명예회복의 움직임은 사건발생 14년이 지난 1989년에야 대구, 경북지역 재야단체와 대학 총학생회가 사형당한 8분의 희생자를 위한 공동의 추모제를 열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지난 1991년 4월 9일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여덟 명 가운데 두 사람, 여정남 열사와 이재문열사의 추모비가 경북대에 세워졌다. 그러나 추모비가 세워지고 5년 뒤, 1996년 6월 18일 밤 추모비가 경찰에 의해 강탈당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엔 빼앗긴 추모비의 흔적만이 남았다. 영남대학교에서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서도원, 도예중, 송상진열사의 추모비가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995년 4월 9일 세워졌다. 그리고 영남대 추모비 역시 같은 해 5월 10일 추모비가 공권력에 의해 강탈 당하였다.

1998년 4월 9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고 1999년 4월에는 인혁당 관련 사형자들에 대한 첫 공개 추모식이 열렸다. 이후 매년 4·9통일열사 추모제 준비위원회에 의해 대구 현대공원과 영남대 통일동산에서 공개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3)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단체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 칭	경북민족통일연맹 (또는 민족통일경북연맹)	관리번호	대구·경북-정치단체-01
창립일	1960. 11. 26.	해체시기	1961. 5.
소속단체/소속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경북민주민족청년동맹		
창립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9혁명기 민주운동이 민족운동으로 확산되는 과정. - 통일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는 시기. -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루고자 함. 		
조직 내용	- 경북시국대책위원회, 민자통경북협의회		
기관지명			
주요활동가	안경근, 안민생, 강신용, 백규천, 이정상, 안잠, 김성달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주장, 통일방안으로는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한론 주장 - 민족자주통일촉진회(1960.8.20.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로 확대)에 경북시국대책위원회 참여(후에 민자통 결성 때 경북민족통일연맹으로 명칭 변경) - 1961. 3. 1. '3·1민족통일촉진권기대회' 개최 - 1961. 3.31. 이대악법반대연합공동투쟁위원회 결성 주도 - 1961. 4. 2. '4·2시위' 주도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승만정권의 극우반공정책이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시켜 온 것에 대해 통일과 민주화를 동시에 고양시켜 나감. - 국제적 중립성과 민족 자주성을 회복시키려고 노력 		
관련자료 (창립선언문, 규약)	선언문, 강령, 규약, 집무세칙, 창립준비위원회규약, 민자통경북협의회준비위원회취지서 등 압수당함		
비 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 칭	경북지구과학살자유족회	관리번호	대구·경북-정치단체-02
창립일	1960. 6. 15.	해체시기	1961. 5.
소속단체/소속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전국과학살자유족회		
창립배경과 과정	- 6·25전쟁 전후한 시기에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교도소 수감자중 사상범인 기결수 및 미결수 등으로서 군인, 경찰, 반공단체 등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들이 범치국가의 정의에 의해 명예회복이 될 것을 기대.		
조직 내용			
기관지명	돌곶		
주요활동가	이원식, 백기만, 이복영, 이삼근, 이용로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 5. 경북유족회 결성 추진 - 1960. 6. 15. 대구역전 상공회의소회의실 500명 경상북도유족회결성대회와 합동위령제준비위원회결성대회 개최 - 1960. 7. 28. 대구역전 광장에서 위령제 개최 - 대구시 동성로 경북유족회 사무실 - 1960. 9. 수창동, 지묘동 송현동 본리동 만통동 등지 답사 - 1960.10. 20. 서울에서 전국유족회결성대회 개최. - 1960. 11. 13. 경주시 월성국민학교에서 경주지구유족회추위로 합동위령제 개최 - 1961. 3. 14. 대구시 종로구 소재 사회당경상북도당사무실에서 이대악법반대공투위결성대회에 경북과학살자유족회 가입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 폭압적 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또는 양민)의 명예를 회복하여 인권신장과 법적 권리를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 올림		
관련자료 (창립선언문, 규약)	- 확보		
비 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 칭	민주민족청년동맹	관리번호	대구·경북-정치단체-03
창립일	1961년 1월 7일	해체시기	1961년 5월
소속단체/소속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민족통일경북연맹, 이대약법공동투쟁위원회		
창립배경과 과정			
조직 내용			
기관지명			
주요활동가	서도원, 도예중,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년 1월 영남일보 민족통일에 관한 호소문 게재. - 이대약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결성을 주도. - 1970년 인혁당 사건의 주류.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4·19혁명기 대구·경북지역에서 민주·민족운동의 고양시킴.		
관련자료 (창립선언문, 규약)			
비 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 칭	민주회복국민회의 경북도지부	관리번호	대구·경북-정치단체-04
창립일	1975. 3. 3.	해체시기	
소속단체/소속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민주회복국민회의(1974.11.27.)		
창립배경과 과정	유신체제 말기 대구지역 대학생들이 단일한 조직을 통해 반유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지역 대학을 규합하여 결성.		
조직 내용	박정권의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경북지역의 정당정치인 및 재야정치세력이 연합하여 결성.		
기관지명			
주요활동가	이원수(민주통일당 정치위원), 박석홍, 박삼세(경북대교수), 현해봉, 유성환(신민당), 김정오(기독교), 주병환(카톨릭), 여규식(목사), 강정애(국제사면위원회 중앙이사), 정기복(독립운동가), 김갑진(의사), 임종진(교수), 노승억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p>박정권의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경북지역의 정당정치인 및 재야정치세력이 연합하여 결성. 특히, 고문방지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폭력정치청산을 위해 활동.</p> <p>1975. 2. 2. 민주회복국민회의 경북도지부 발기인대회 1975. 3. 3. 민주회복국민회의 경북도지부 결성대회(YMCA회관)</p>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합법적 정치활동이 제약된 유신체제 아래,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인혁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대중에게 파급시켰다.		
관련자료 (창립선언문, 규약)	결의문, 별첨		
비 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 칭	사회정의구현을 위한 경북학생협의회	관리번호	대구·경북-정치단체-05
창립일	1979. 9.	해체시기	
소속단체/소속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계명대, 영남대, 경북대 등 3개 대학이 연합하여 결성		
창립배경과 과정	유신체제 말기 대구지역 대학생들이 단일한 조직을 통해 반유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지역 대학을 규합하여 결성.		
조직 내용			
기관지명			
주요활동가	권오국(계명대), 임광호(경북대), 하종호(경북대), 임진호(계명대), 정동남(경북대)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1979년 9월 4일 동협의회 명의로 선언문을 발표. 그 내용으로는 ① YH사태의 진상규명 및 농협의 수탈행위와 노동3권의 유보조항 철폐 ② 김경숙양의 죽음에 사죄하라 ③ 외세의존적 경제정책 중지 ④ 유신헌법 철폐 및 기본권 보장 ⑤ 구속 민주인사 석방 및 강제휴학, 강제입영의 중지 ⑥ 교수 재임명제 철폐 및 학내 모든 경찰요원의 추방 등 6개항 결의. 계명대에서는 오전부터 유신정권 성토대회를 두 차례 열고, 오후 가두시위를 전개하면서 경찰과 대규모 충돌을 벌임. 시위과정에서 '유신철폐', '어용 교수 물러나라', '조국통일을 정권적 차원에서 벗어나 민족차원에서 실현하라'는 등의 구호가 제기.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1970년대 유신정권 말기 대구지역에서 학생층과 재야세력의 반유신운동이 고양시킴. 이 사건 직후 경북대와 영남대는 휴교. 계명대에서는 시위가 더욱 확대됨.(10월 24일 2천여 명 참가 반유신 시위)		
관련자료 (창립선언문, 규약)	선언문이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1983), 1970년대 민주화운동 V」(1987) 등에 약술.		
비 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 칭	두레회	관리번호	대구·경북-정치단체-06
창립일	1978.	해체시기	
소속단체/소속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창립배경과 과정	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선후배간의 소통공간으로 양서조합을 결성. 두레란 명칭은 두레가 농경사회에서 공동체를 지향한 것으로서, 민족사회의 모범의 형태인 것으로 간주하여 붙임. 수도산 능인 중고등학교 근방에서 시작하여 경대 후문으로 옮김.		
조직 내용	이사회, 이사장, 대표 등으로 구성		
기관지명			
주요활동가	정상용, 서성교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선후배간의 소통공간으로 양서조합을 결성. 수도산 능인 중고등학교 근방에서 시작하여 경대 후문으로 옮김. 1980년 5월 휴교 조치이후 분화가 이루어짐.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학생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의식을 고취시킴.		
관련자료 (창립선언문, 규약)	판결문		
비 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 칭	민통련 경북지부	관리번호	대구·경북-정치단체-07
창립일	1984.	해체시기	
소속단체/소속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창립배경과 과정	1984년에 접어들어 운동세력의 조직적 연대를 모색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연대조직의 결성을 둘러싼 견해차로 1984년 6월 민중민주협의회(이하 민민협)와 1984년 10월 민주통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각각 결성되었다. 운동력의 증폭과 양조직의 확대에 따른 지역운동내의 혼선 등을 계기로 1984년말부터 연합운동을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두 단체는 국민회의안을 기본으로 하여 통합조직의 형태로 결정되어 1985년 3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을 결성한다.		
조직 내용			
기관지명	대구의 소리, 민중의 소리		
주요활동가	이강철, 권오국 김충환 유정수 양혜단 김성오 신기복 박동주 박문수 최희종 민병중 황권연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민주통일민중연합이 평가한 4월 5일 대구대회의 의의. 「신민당 개헌추진 각도지부 현판식의 과정에서 대중의 군사독재에 대한 불만은 부산대회에서의 열기를 광주대회가 이어 받아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의 불꽃을 계기로 전국민에 확산되었다. 뒤이어 개최된 대구대회는 한층 고양된 열기와 대중들의 호응으로 군사독재 퇴진과 개헌에의 요구를 민중투쟁의 양상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분절점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집회는 개헌운동의 대중적 투쟁국면을 창출하였고, 1985년 2·12총선의 열기를 한 단계 끌어올려 현 정부에 대한 민중적 저항운동으로 발전시켰으며, 현 정부를 국내외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신민당 개헌집회는 1960년 4·19민중봉기 이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전국적 규모로 가장 많은 정치대중이 동원된 역사적 경험이 되었다.		
관련자료 (창립선언문, 규약)			
비 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 칭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대구·경북지역)	관리번호	대구·경북-정치단체-08
창립일	1987. 6. 1.	해체시기	
소속단체/소속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통일민주당, 민주협, 민통련, 종교단체 등		
창립배경과 과정	국민운동본부의 조직적 연원은 1985년 11월의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근태 전 민청련 의장에 대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살인적 고문사실이 폭로되면서 대중적 공분이 불러일으켜지고, 이에 따라 민통련과 기독교, 그리고 신민당과 민주협의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공동전선이 펼쳐졌다. 고문문제는 전두환 정권에 반대되는 모든 민주세력이 단결할 좋은 계기를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고문공동대위'라는 가장 광범위한 민주연합전선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 틀은 1986년 권인숙양 성고문사건을 거쳐, 마침내 1987년 1월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이 밝혀지면서 더욱 결속을 강화하여 이른바 4·13 호헌조치 이후 국민운동본부로 발전했던 것이다. 이 후 1987년 5월 27일 결성대회를 가지고 1987년 6월 1일 현판식을 가지면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조직은 전국운동본부(이하 전국본부), 각도, 특별시, 직할시 본부(이하 도본부), 시·군·구 지부, 읍·면·동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조직 내용			
기관지명			
주요활동가	이태광, 함종호, 김종길, 장명숙, 박형룡, 유연창, 원유술, 류강하, 이승학, 주영스님, 유승완, 목요상, 이강철, 김찬수, 김근식 외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군부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정치권과 재야세력이 반독재통일전선을 형성하여 6·10항쟁을 주도하였다.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6·10항쟁을 통해 노태우정권으로부터 6·29선언을 받아내고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다.		
관련자료 (창립선언문, 규약)	결성선언문 -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목표, 조직, 운영대강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6월 민주화대투쟁』, 민중사, 1987 참조.		
비 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 칭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관리번호	대구·경북-정치단체-09
창립일	1991. 12. 8.	해체시기	
소속단체/소속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북도연맹,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 경산민주단체협의회, 대구·경북청년단체연석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창립배경과 과정	87년 광범위한 노동조합의 설립, 자주적 농민회의 창립, 청년, 종교, 문화운동단체 등 각계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조직들이 모여 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만들어졌다. 이후 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창립과 더불어 대중운동은 다시 한번 고양기를 맞이하였고 91년 전노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도시민협의회(전민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과 전민련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을 결성하였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지역 단체와 부문조직이 모여서 1991년 12월 8일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이 출범하게 되었다.		
조직 내용			
기관지명			
주요활동가	이영기 의장 외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의 구심이자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각계각층민중들의 총단결에 기초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완수를 목표. 반파쇼민주화운동과 주한미군철수 관련 시위 및 집회.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민족민주운동을 위한 전선운동체로서 반민주 및 반식민주의 투쟁에 앞장섬.		
관련자료 (창립선언문, 규약)	대경연합 홈페이지 참조		
비 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 칭	4·9통일열사 추모제 준비위원회	관리번호	대구·경북-정치단체-10
창립일	1999. 4.	해체시기	
소속단체/소속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5·18 동지회, 경북대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경북대민주동문회,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영남대민주동문회, 김수경열사추모모임,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대구지역본부,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반미여성회, 반미청년회,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전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대구·경북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코람데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청년연합회대구본부.		
창립배경과 과정	준비위는 박정희 정권이 군사독재의 장기집권으로 희생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되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4월 9일 8분에 대한 사법살인으로 몰아넣은 사건으로 현재까지 초보적 단계의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준비위는 매년 추모제를 통해 8명의 열사들이 이루고자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사법적으로 8분에 대한 명예회복을 받아내기 위해 조직되었다.		
조직 내용			
기관지명			
주요활동가	함중호 외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관련자료 (창립선언문, 규약)	창립선언문 780년대 한국 역사에 있어 광주학살과 더불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28년이 지나 참여정부의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승리라 이야기하던 이 시대에도 인혁당문제에 관해선 아직도 초보적인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는 살아있는 자들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솔직히 고백하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하고, 제 2의 건국을 해야 한다는 소리도 새롭다. 그렇지만, 독재정권에 의한 피의 역사, 그리고 28년이 지나도록 이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무관심과 냉대를 그냥 두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조국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혁당사건으로 시형당하신 8분 열사의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49 열사들의 진상을 규명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 분들의 뜻을 기리며 이 시대에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물려주는 데서 이 사업의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비 고			

4)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사건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 칭	2·28학생운동		관리 번호 대구·경북-정치사건-01
위치	문헌상		
	현 주소		
현재의 모습			
규모	부 지	크 기	
	용 도	기 타	
역사적 의의			
이승만 정권 아래 진행된 학생의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			
사 건 의 개 요	사건 발생일	1960. 2. 28.	사건종료일 1960. 2. 28.
	관련자 / 관련단체	경북고등, 대구고등, 경북여고, 경북사대부고 등	
	법적상태	합법, 비합법, 반합법	
	사건의 전개과정과 결과	상기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와 '학생을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	
	정부대응	경찰들이 학생의 거리시위를 막음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이승만 정권에 대해 학생층이 벌인 최초의 반독재운동으로서 3·15부정선거시위와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작용했고, 대구지역에서 4·19혁명 시기 학생운동의 상징으로서 영향을 끼침.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2·28민주운동사 및 2·28기념사업회 홈페이지 활용 가능			
관련 자료			
2·28민주운동사에 총망라되어 있음.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 칭	4·2데모사건		관리 번호 대구·경북-정치사건-02
위치	문헌상	대구역 광장	
	현 주소	대구역 주변	
현재의 모습			
백화점이 들어서 과거 대구역의 모습은 사라짐			
규모	부 지	크 기	
	용 도	기 타	
역사적 의의			
장면정권이 민주·민족운동에 대해 억압하기 위해 만든 데모규제법과 반공특별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개된 민주화운동			
사 건 의 개 요	사건 발생일	1961. 4. 2.	사건종료일 1961. 4. 2.
	관련자 / 관련단체	이대악법반대연합공동투쟁위원회	
	법적상태	비합법	
	사건의 전개과정과 결과	1961년 3월 31일 대구지역 각종단체들이 참여하여 이대악법반대연합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해 동년 4월 2일 대구역 광장에서 장면정권의 대중운동 탄압에 맞서 집회와 햇불시위를 전개	
	정부대응	정부는 이 시위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관련자를 법적 처리하는 강경한 자세를 보임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4·19혁명을 계기로 각 사회계층이 인권신장과 법적권리를 회복하고, 사회정의와 민족통일운동이 고조되게 하는 강력한 영향을 미침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관련 자료			
언론보도 자료, '5·16혁명재판소 기록'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 칭	최영호 경북대 간첩사건		관리 번호	대구·경북- 정치사건-03
위 치	문헌상			
	현 주소			
현재의 모습				
규 모	부 지	크 기		
	용 도	기 타		
역사적 의의				
사 건 의 개 요	사건 발생일	1972. 1. 29.	사건종료일	
	관련자 / 관련단체	최영호 등 7명		
	법적상태	비합법		
	사건의 전개과정 과 결과	육군보안사, 서울·대구 등지에서 최영호 경북대 교수 포함 대남간첩 7개망 23명 검거 발표		
	정부대응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관련 자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1983. 253쪽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 칭	경북대 반독재 민주구국선언		관리 번호	대구·경북- 정치사건-04
위 치	문헌상			
	현 주소			
현재의 모습				
규 모	부 지	크 기		
	용 도	기 타		
역사적 의의				
사 건 의 개 요	사건 발생일	1973.11.	사건종료일	
	관련자 / 관련단체	최문수 등 2명		
	법적상태			
	사건의 전개과정 과 결과	경북대생 2백여 명이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을 외치며 경북도청을 향해 2백m 가량 가두시위 벌임. 이 시위에 앞서 농대 2년 최문수가 2백여 장의 “반독재 구국선언”을 공대 강의실에 돌리고 교내 로터리에서 3백 여 명과 함께 시위를 벌임.		
	정부대응	최문수 등 2명을 연행하고, 이중 최문수는 구속하고 두 명은 석방함.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유신체제 전반기 유신반대 투쟁을 확산시킴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관련 자료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이강철 구속 사건		관리 번호	대구·경북- 정치사건-05
위치	문헌상			
	현 주소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사 건 의 개 요	사건 발생일	1973. 11.	사건종료일	
	관련자 / 관련단체	이강철		
	법적상태			
	사건의 전개과정 과 결과	유신체제에 맞서 경북대 교내에서 반독재 민주 시위를 전개함.		
	정부대응	이강철을 구속 수사함.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경북대에서 반독재 민주운동 시위를 벌이고, 반독재투쟁을 확산시킴.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관련 자료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2차 인혁당사건)		관리 번호	대구·경북- 정치사건-06
위치	문헌상			
	현 주소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4·19혁명시기 발생한 민주·민족운동이 유신체제 아래에서 지속됨		
사 건 의 개 요	사건 발생일	1974. 4. 25.	사건종료일	
	관련자 / 관련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 : 도예중, 서도원, 이수병, 하재완,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 무기 : 전창일,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이태환, 유진곤, 이성재 · 징역 20년 : 김종대,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 징역 15년 : 전재권, 황현승, 이창복, 임구호 		
	법적상태	합법, 비합법, 반합법		
	사건의 전개과정 과 결과	민청학련의 배후조직으로 인혁당 관계자들이 지목됨으로써 이른바 제2차 인혁당사건이 발생. 인혁당 관련자들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은 6월 15일부터 시작되어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 이 가운데 도예중,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된 지 20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집행을 당함.		
	정부대응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반유신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학생운동과 재야를 탄압했으나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은 고양되어감.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관련 자료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계명대 4·19선언문 낭독 및 김상진 유서 배포 사건		관리번호	대구·경북-정치사건-07
위치	문헌상			
	현 주소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76. 6.	사건종료일	
	관련자 / 관련단체	백현국, 서석국, 강봉기, 김진태, 서태열, 장의식		
	법적상태			
	사건의 전개과정과 결과	계명대에서 반독재 유신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김상진의 유서를 배포함.		
	정부대응	백현국, 서석국, 강봉기, 김진태, 서태열, 장의식 등 6명을 구속.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계명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침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관련 자료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경북대생 유희 가두시위		관리번호	대구·경북-정치사건-08
위치	문헌상			
	현 주소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교내시위 중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반유신독재운동을 확산시킴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78. 11. 7.	사건종료일	
	관련자 / 관련단체	김병호, 김진덕, 전상수, 전병욱, 박세원, 김인제, 김창수, 정의철, 구자숙, 이문주, 이정숙, 이현숙, 김기동, 황정모, 이원근, 서상진, 조선근, 이상훈, 이 건, 김연석, 이근택, 김성근, 신옥란, 김사열, 배채진, 반채석, 조용광, 황철호		
	법적상태			
	사건의 전개과정과 결과	1978년 11월 7일 경북대생 2천여 명이 대구시내 중심가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데모를 벌임. 현정권의 퇴진, 구석학생 석방, 어용교수 사퇴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격렬히 충돌함. 파출소 1개, 경찰차량 8대, 학생과 경찰 상당수 부상.		
	정부대응	시위학생 2백여 명을 연행하여 7명을 구속시키고 21명을 구류 처분함.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을 대구시민에게 파급시킴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관련 자료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 칭	영남대 탈춤 공연 사건		관리 번호	대구·경북- 정치사건-09
위 치	문헌상			
	현 주소			
현재의 모습				
규 모	부 지		크 기	
	용 도		기 타	
역사적 의의		축제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움.		
사 건 의 개 요	사건 발생일	1979. 5. 15.	사건종료일	
	관련자 / 관련단체	이태현 등		
	법적상태			
	사건의 전개과정 과 결과	1979년 5월 학교 축제 때 탈춤반 학생들이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함.		
	정부대응	8명을 연행하여 2명을 구속함. 학교당국은 8명을 전원 무기정학 처분함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축제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움.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관련 자료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 칭	계명대 연극 사건		관리 번호	대구·경북- 정치사건-10
위 치	문헌상			
	현 주소			
현재의 모습				
규 모	부 지		크 기	
	용 도		기 타	
역사적 의의		축제 행사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반유신독재운동에 대한 의식을 일깨움		
사 건 의 개 요	사건 발생일	1979. 5. 10.	사건종료일	
	관련자 / 관련단체	권오원, 이상윤, 박민서, 김종성, 서순주		
	법적상태			
	사건의 전개과정 과 결과	1979년 5월 학교 축제 때 연극반 학생들이 이근삼 작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를 공연하고 있을 때, 공연 내용이 사전 검열된 것과 다르다하여 출연자들이 현장에서 끌려나오고 기독교학생회 회장 권오원이 학교 직원들에 의해 구타당함.		
	정부대응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축제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반유신독재운동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움.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관련 자료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지역 사건조사				
명 칭	신민당과 민추협의 개헌현판식		관리 번호	대구·경북- 정치사건-11
위 치	문헌상	아세아극장		
	현 주소	대구시 중구 전동 1		
현재의 모습				
규모	부 지		크 기	
	용 도		기 타	
역사적 의의				
사 건 의 개 요	사건 발생일	1986. 4. 5.	사건종료일	
	관련자 / 관련단체	신민당, 민추협, 민주산악회, 민주헌정연구회, 민통련		
	법적상태			
	사건의 전개과정 과 결과	개헌현판식 집회는 3월 11일 서울지부결성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3월 23일 부산대회, 3월 30일 광주대회, 4월 5일 대구대회, 4월 19일 대전회의, 4월 26일 청주대회, 5월 3일 인천대회, 5월 10일 마산대회, 5월 31일 전주 대회가 차례로 개최됨. 특히, 대구대회는 민통련경북지부가 '4·5대구민중투쟁'이라 부를 만큼 대학생 및 재야세력이 다수 참여하여 대중투쟁으로 전개됨.		
	정부대응	개헌현판식을 방해하기 위해 4월 5일 오후 3시에 축구국가대표 평가전을 개최하고, 초·중고 학생과 공무원은 식목행사에 동원하였으며, 예비군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함. 또 식당인 아세아극장 옥상출입구를 시멘트로 봉쇄함. 그리고 141명이 연행되고 16명이 구속됨.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1985년 2·12총선(신민당이 100석 이상 차지)의 열기를 한 단계 끌어올려 전두환정권에 대한 대중적 저항운동으로 발전시킴.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관련 자료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지역 사건조사				
명 칭	6월 항쟁		관리 번호	대구·경북- 정치사건-12
위 치	문헌상			
	현 주소			
현재의 모습				
규모	부 지		크 기	
	용 도		기 타	
역사적 의의				
이 사건은 3·1운동, 4·19, 광주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여 군부독재정권의 장기집권에 반대하여 민주화의 기틀을 세운, 근대 한국민족사의 주요한 민중운동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사 건 의 개 요	사건 발생일	1987년 6월 10일	사건종료일	1987년 6월 29일
	관련자 / 관련단체	국민운동본부		
	법적상태	합법, 비합법, 반합법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1987. 6.10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 1987. 6.15. 경북대생 등 1천여 명이 도심 곳곳에서 격렬한 투석시위 전개 1987. 6.16. 대구시내 4개 대학 연합 가두시위 1987. 6.20. 대구의 가두시위는 전날에 비해 그 규모가 한층 커지고 격렬해 짐. 최대규모 1만 5천여 명이 이르는 가두투쟁과 '최루탄추방공청회'(민가협 주최) 등이 진행. 1987. 6.23. 대구시내 4개대생 1천여 명이 교내집회 후 가두로 진출 1987. 6.26. 국민운동본부가 공식 주도한 6·26평화대행진 대구에서 4만여 명이 참가. 포항 5백명. 1987. 6.29. 노태우정권 6·29선언발표.		
	정부대응	사건발생이후 시종일관 강경진압을 하였으나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민중봉기에 굴복하여 6·29선언을 발표.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사회의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했던 많은 민주화운동세력들이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운동은 그 열기가 6월 항쟁 이후 더욱 뜨거워져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졌다.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관련 자료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지역 사건조사				
명 칭	영남대 박근혜재단 퇴진운동과 총장직선제 투쟁		관리 번호	대구·경북- 정치사건-13
위 치	문헌상	영남대학교		
	현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현재의 모습				
규 모	부 지		크 기	
	용 도		기 타	
역사적 의의				
사 건 의 개 요	사건 발생일	1988. 10. 18.	사건종료일	1988. 12. 23
	관련자 / 관련단체	영남대 교수협의회, 영남대 직원노조, 영남대총학생회		
	법적상태	합법, 비합법, 반합법		
	사건의 전개과정 과 결과	1988년 10월 18일에는 영남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영남대 본관 3층 대회의 실 열림. 11월 8일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그리고 총학생회로 구성된 '영남학원 민주화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재단이사진 퇴 진을 요구하며 대명동 캠퍼스까지 민주화대행진을 벌임. 결국 박근혜를 비롯한 비리에 연루된 재단이사진들은 사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8 년 12월 영남대에서 최초로 직선총장선거를 치렀으며, 김기동 총장이 제 1대 직선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정부대응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군부독재잔재 청산을 통한 학내민주화 쟁취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관련 자료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지역 사건조사				
명 칭	4·9 통일열사투쟁		관리 번호	대구·경북- 정치사건-14
위 치	문헌상			
	현 주소			
현재의 모습				
규 모	부 지		크 기	
	용 도		기 타	
역사적 의의				
사 건 의 개 요	사건 발생일	1989.	사건종료일	현재
	관련자 / 관련단체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경북대 민주동문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 위원회, 4·9통일열사 추모제 준비위		
	법적상태	합법, 비합법, 반합법		
	사건의 전개과정 과 결과	1989. 4. 9 4·9열사 공동추모제 1991. 4. 9 경북대 추모비 건립 1995. 4. 9 영남대 추모비 건립 1995. 5. 10 영남대 추모비 공권력에 의해 강탈. 1996. 6. 18 경북대 추모비 공권력에 의해 강탈. 1998. 4. 9 천주교인권위에서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1999. 4. 9 공개추모식.		
	정부대응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관련 자료				
기타				

5) 대구·경북 민주화운동 주요사적지

(1) 대구역

□ 위치 : 대구시 중구 칠성동



대구역 광장



현 대구역

□ 역사적 의의

대구역은 대구지역 민주화운동사의 상징적 공간이다.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대구역은 대규모 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대중 집회의 근거지로서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60. 4.19. 경북대 시위

- 1960. 4.26. 경북대 대학교수단 시위
- 1960. 8.25. 경북교조, 부당인사조치에 항거하고 총사퇴를 결행.
- 1961. 3.20. 교원노조지원투쟁위원회의 햇불 데모 개최.
- 1961. 3.21. 사회당·통사당·민민청·통민청 공동으로 이대악법반대시민결기대회 주최
- 1961. 3.22. 한·미경제협정반대결기대회 개최
- 1961. 3.24. 이대악법반대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 구속학생 석방·악법철폐 요구 결기대회 및 햇불데모
- 1961. 3.25. 민주민족청년동맹주최의 통일촉진옹변대회 개최.
- 1961. 4. 2. 이대악법공투위 이대악법 반대 시위(4·2데모사건)
- 1961. 4.26. 통일운동
- 1963. 3.23. 군정연장 반대 시위
- 1978.10. 경북대 긴급조치 해제, 학원자유, 유신반대 시위